

第278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1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8年11月13日(木)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 가. 노동부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고용보험기금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다. 임금채권보장기금
 - 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審査된案件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1
 - 가. 노동부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 가. 고용보험기금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다. 임금채권보장기금
 - 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시14분 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한 노동부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 측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들의 질의 및 정부 측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가. 노동부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고용보험기금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다. 임금채권보장기금

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委員長 秋美愛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 소관의

○**노동부장관 이영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8회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 노동부는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을 해소하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업과 산업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가 점차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확대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생의 노사 협력 문화 정착, 서민층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재해율의 감소 등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보다 9.6% 증액된 11조 65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 11조 437억 원에서 경제난 극복 등을 위해 6092억 원 증액한 것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인턴제,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해외 취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립 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둘째,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 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훈련기간 동안 수입 감소로 인한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취약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안전,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근로 감독 행정에 있어 노사 자율에 의한 사전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실질적 보호 효과를 높이고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예상되는 실업급여 신청 증가에 대비하여 예산액을 늘리고 실직 가정을 위한 생계비 대부 사업도 신설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형성 확산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9회계연도 노동부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11조 653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0.2% 증가한 1조 918억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조 248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07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51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억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억 원입니다.

한편 내년도 노동부 소관 기금 지출 규모는 10조 5612억 원으로 기금별로 살펴보면, 고용보험 기금 5조 6206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조 3723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2064억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286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333억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 고용 불안 해소,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정부로서 최선을 다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노동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노동부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송영중** 기획조정실장 송

영중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09년 예산·기금 편성 방향, 총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입니다.

내년도 예산·기금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 및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내년 경제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세입증가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분야에 재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노동 예산·기금 편성 방향입니다.

고용부진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서비스 강화,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등 직업능력 개발지원 확대,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산재보험 역할 강화,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및 선진 노사문화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괄입니다.

09년도 노동부 일반지출 규모는 11조 437억 원으로 금년 대비 41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은 9464억 원, 기금은 10조 974억 원입니다.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청년층의 취업촉진 지원을 확대했고, 신규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통한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지역단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선진 노사문화 구축, 취약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신규 시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업을 통폐합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입니다.

수입은 전년보다 39억이 감소한 2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별로는 과태료 수입과 기타재산 수입은 부당하고 이행강제금 수입 감소와 과독광부적립금 수입 종료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총계 기준 99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8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0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

억 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억 원이 증가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고용정책 260억 원, 노사정책 41억 원, 근로조건보호 69억 원, 고용평등실현 5000만 원, 산재예방 70억 원, 국제노동협력 33억 원, 노동행정지원 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직업능력개발은 1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고용정책사업입니다.

건설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청년실업대책 추진사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사회적 기업 육성에 139억 7200만 원, 취업애로계층 직업진로개발 지원에 6억 6200만 원, 자활취업촉진 지원에 10억 8700만 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5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글로벌 취업지원을 위해서 202억 7400만 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83억 5000만 원, 정부지원 청년인턴제로 19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입니다.

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를 위해서 65억 500만 원, 고용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122억 2800만 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 개선을 위해서 12억,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로 102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및 취약계층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으로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에 489억 1600만 원, 취약계층 실업자 직업훈련 등에 186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에 594억 5200만 원, 인력공단 정보화에 25억 5400만 원, 국가기술자격 검정 인프라 확충에 10억 원,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에 1285억 5000만 원, 한국기술교육대학 운영에 90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평등실현사업입니다.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운영 등 남녀고용평등사업에 2억 원,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에 3억 1600만 원,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1억 8900만 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정책사업입니다.

노사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강화에 68억 3600만 원,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에 149억 6000만 원,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에 32억 6900만 원, 한국노동교육원 출연에 85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조건보호사업입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및 권익 보호를 위해서 105억 3000만 원, 근로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급을 위해서 47억 8400만 원,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그리고 제도발전 지원을 위해서 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재예방사업입니다.

진폐위로금 지급에 546억 6000만 원, 건강진단 및 진폐근로자 복지 사업을 위해서 53억 5700만 원, 진폐예방 경비를 위해서 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노동협력사업입니다.

ILO 의무부담금, ILO와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등을 위해서 ILO 이사국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기구 협력지원에 126억 7500만 원, 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 추진 등을 위해서 5억 6300만 원, 한국노동상황 바로 알리기를 위해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행정지원입니다.

지방노동관서 청사신축 및 유지·관리에 240억 3000만 원, 노동행정역량강화 및 노동행정정보화 지원에 136억 4700만 원, 노동정책연구개발 및 노동통계조사 실시에 52억 2800만 원, 종합노동상담센터 운영에 8억 700만 원, 노동위원회 운영에 93억 3600만 원, 노사정위원회 운영에 27억 4700만 원, 전국 지방노동관서 운영에 18억 원, 종합상담센터 혁신도시 이전 설계비 3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내부거래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전출금에 102억 1800만 원,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전출금에 155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촉진기금 전출금에 200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금에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된 제주도 이관사업입니다.

제주도 이관 고용정책 사업비로 16억 6400만 원, 제주도 이관 직업능력개발 사업비로 17억 9900만 원, 노사정책 사업비로 1억 3200만 원, 노

동행정기관 운영비로 1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이하 세출예산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같음하고, 44쪽으로 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기금개요는 생략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은, 실업급여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고용지원서비스망 확충, 시장 및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 도입,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유인 강화,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지속적인 확대,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강화 사업 등이 주요 특징입니다. 사업의 효과성이 낮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고용보험사업은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수입은 보험료 4조 940억 원, 재산수입 3703억 원, 융자금회수 904억 원 등 총 10조 673억 원으로 금년보다 14%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조 6546억 원, 실업급여 3조 557억 원 등 총 5조 2082억 원을 지출하고, 4조 8591억 원을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고용안정사업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1151억 원,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에 412억 원, 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금에 35억 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에 163억 원, 교대제전환지원금에 61억 원,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사업에 22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에 121억 원, 장기실업자 등 창업점포 지원에 140억 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및 고용컨설팅 지원에 17억 원, 장애인시설설치비용용자에 80억 원, 청년인턴 지원을 위해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조정 및 고용안정 사업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323억 원, 전직지원장려금에 28억 원,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180억 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에 15억 원,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지원에 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노사공동재취업센터 지원에 42억 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에 73억 원, 민간취업기관 지원에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원사업입니다.

종합직업체험관 설립에 146억 원,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 지원에 143억 원,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고용안정전산망관리에 149억 원, 고용보험전산망관리에 65억 원, 채용박람회 지원에 18억 원,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에 30억 원, 고용동향조사에 48억 원,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에 49억 원, 고용지원서비스 모니터링에 11억 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및 동향분석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위해서 3911억 원, 직업능력개발 시설·장비 자금 대부에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전직 실업자 취업훈련 지원을 위해서 1773억 원, 근로자 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위해서 580억 원,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를 위해서 9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특화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에 790억 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에 87억 원,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에 169억 원,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JUMP 사업 지원에 110억 원,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 지원에 52억 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에 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우선선정직종 훈련 실시에 1104억 원,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사업 지원에 1100억 원, 한국기술교육대학 능력개발사업 지원에 302억 원,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서 1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 지원에 332억 원, 지역별 훈련수요 및 이수자 조사에 8억 원, 노사협력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24억 원, 국제 직업능력 측정 프로젝트 참여에 1억 원, 직업능력개발 기관 및 과정 평가에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에 463억 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37억 원,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11억 원, 여성·고령자 고용촉진 컨설팅에 20억 원,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용자사업에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 고용촉진 및 고용률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촉진 지원에 33억 원, 산전후휴가급여에 1978억 원, 육아휴직급여에 1399억 원, 육아휴직장려금에 211억 원,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에 2억 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에 113억 원, 공공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25억 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27억 원, 여성 고용환경 개선 용자에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사업입니다.

구직급여는 2조 6564억 원, 취업촉진수당 지원 3976억 원, 연장급여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사업 운영 등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603억 원, 고용보험사업 운영에 477억 원, 과·오납 반환금에 5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은 산재보험급여가 증액되었고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강화 및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재해다발 부문 재해감소 집중관리 및 산재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보험료 4조 8196억 원, 재산수입 1536억 원, 경상이전수입 1373억 원, 용자원금 회수 115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5억 원, 여유자금 회수 2조 7278억 원 등 총 7조 9856억 원으로 금년 대비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보험급여 3조 6348억 원, 근로복지공단 사업 2736억 원, 산업안전공단 사업 2478억 원, 산업재해예방 용자 916억 원을 지출하고 3조 6133억 원을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계획입니다.

보험급여 및 반환금 지급사업입니다.

요양급여에 7749억 원, 휴업급여에 7874억 원, 장해급여에 1조 4225억 원, 유족급여에 3564억 원, 간병급여에 496억 원, 상병보상연금에 1710억

원, 장의비에 242억 원, 직업재활급여에 376억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에 112억 원, 반환금 9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입니다.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증진 및 한국산재의료원 특화 지원을 위해서, 직업훈련비용 지원 등 재활 사업을 위해서 463억 원,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에 101억 원, 산재의료원 지원에 241억 원, 대구재활 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재보험사업의 위탁운영 지원입니다.

산재보험 위탁운영 지원을 위해서 1372억 원,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등 사업수행경비로 415억 원, 산재보험시설 건립을 위해서 36억 원, 근로복지공단연수원 신축을 위해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입니다.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조성 지원을 위해서, 먼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으로 840억 원, 유해화학물질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으로, 안전관리 기술지원에 126억 원, 보건관리 기술지원에 140억 원, 대행기관 기술지도 수수료로 1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의식 교육 및 홍보입니다.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해서 162억 원,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으로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재예방 위탁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산재예방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 888억 원,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을 위해서 6억 원, 산재예방시설 건립을 위해서 81억 원,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용자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위해서 110억 원, 대학학자금 용자를 위해서 51억 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에 72억 원, 요양비 대부사업에 25억 원,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에 9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관리비입니다.

인건비 11억 600만 원, 기타 경비 29억 5700만 원,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에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와 주요 특징은 생략하고,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사업주부담금 1083억 원, 가산금·변제금·이자수입·일반회계전입금 등에 1111억 원, 여유자금 3063억 원 등 총 5257억 원으로 금년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해당금에 1875억 원, 무료법률구조 지원에 71억 원, 반환금 25억 원 등 총 2064억 원을 집행하고 여유자금으로 319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별 계획은 생략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와 주요 특징은 생략하고,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수입은 장애인고용부담금 1684억 원, 용자원금 회수에 237억 원, 일반회계·복권기금 전입금에 290억 원 등 3844억 원으로 금년보다 8.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용장려금 1258억 원, 장애인공단 출연사업비 840억 원, 용자사업비 125억 원 등 총 2338억 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으로 1506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 1258억 원, 중증장애인 고용유지비용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116억 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29억 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알선관리에 21억 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12억 원, 장애인 영업장소 전대에 25억 원, 장애인근로자 용자에 100억 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추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에 93억 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36억 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고용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17억 원, 장애인 고용 정보화사업 지원에 26억 원, 홍보·대외협력 사업 지원에 11억 원, 인건비 및 기타 사업운영비에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주요 특징은 생략하고,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복권기금 전입금에 116억 원, 이자수입 157억 원, 융자금 회수 682억 원 등 총 2892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중소기업 사업 625억 원, 신용보증 사업 109억 원, 실업대책 사업 297억 원 등 총 1031억 원을 지출하고 1861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별 계획입니다.

중소복지 사업을 위해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에 320억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에 200억 원, 저소득근로자의 고교생자녀 장학금 지원에 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해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지원에 12억 원,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에 6억 원, 근로복지 포털사이트 운영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용보증 사업입니다.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대위변제 사업에 75억 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 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지원에 11억 원,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창업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이하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같음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정진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2009년도 노동부 소관 수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사업별 수정예산안 순서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약 10조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의 수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 수정예산안은 6092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454억 원, 고용보험기금 4124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514억 원 등이며 일자리 창출, 청년·취약계층 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노동부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231억 원이 증가한 11조 6529억 원이며 일반회계 1836억 원, 고용보험기금 7500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09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510억 원이 추가 증액된 10조 6928억 원입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취약계층 생계비 대부사업 등 5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은 6092억 원이 추가 증액된 11조 6529억 원입니다.

사업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09년도 당초에 1393억 원이었습니다는 1738억 원으로 3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지원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09년 예산안으로 19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는 수정예산은 776억 원으로 5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확대사업은 내년도 당초안이 489억 원이었습니다는 920억 원으로 4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실업급여는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3조 557억 원에서 3조 3265억 원으로 27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내년도 당초안으로 32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는 수정예산은 457억 원으로 증액하여 순증은 134억 원입니다.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은 당초에 86억 원이었습니다는 121억 원으로 수정해서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직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사업입니다.

09년 당초 안이 1773억 원입니다는, 수정안으로 2373억 원을 반영해서 600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취약계층 훈련생계비 대부사업입니다.

당초 99억 원을 356억 원으로 25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96억 원에서 수정예산을 486억 원으로

39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진흥기금입니다.

신규 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사업으로 24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으로 27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사업 재원으로 조성된 IBRD 차관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4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진훈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정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의 총 재정 규모는 세입세출예산안 9922억 원, 고용보험기금 등 5대 기금 19조 2523억 원 등 총 20조 2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97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 규모 감소의 주요인은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 전출금 및 기금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일반지출 규모는 세입세출예산안 9464억 원, 기금 계획안 10조 974억 원, 총 11조 4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인 41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로부터 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1454억 원, 고용보험기금 4124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514억 원 등 총 6092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7일자로 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노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 규모는 당초 20조 2445억 원에서 20조 44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일반지출 규모는 11조 437억 원에서 11조 6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재원화

에 따른 문제입니다.

2009년에 총 규모 10조 673억 원, 일반지출 규모 5조 2082억 원으로 전체 노동부 재정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은 2005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수혜자의 범위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하면서 '기여에 따른 수혜'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용보험료가 고용부담금화하면서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으로의 발전을 제약하고 고용보험기금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수혜자의 범위를 보험료 납입자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및 기금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입니다.

예산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계속사업을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향후 입법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기금사업은 각 기금법에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직업체협관 건립사업과 일반회계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취약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보험기금사업 중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사업 등 장애인 관련 3개 사업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 조항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 고용보험기금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JUMP 지원사업,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법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시 고용보험기금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 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이나 시행령에 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고용보험기금 신규사업은 고용보험법 제80조 용도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생계비 대부사업,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사업 중 고용보험기금 지원 부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JUMP 지원사업,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 4개 고용보험기금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예방사업 예산의 미흡 문제입니다.

10여 년째 산업재해율이 0.7%대에 머물러 있으나 2009년에도 별다른 산업재해 예방 예산 증액이나 사업구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오히려 산업재해예방 예산안의 총 규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 총액의 7.8%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의 8% 이상 지출규정에 미달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창업점포 지원용자사업의 감액 필요성입니다.

2009년에 총 253억 원의 창업점포 용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자영업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근 불황으로 자영업 창업의 실패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액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억 41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된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30~40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사업이나 고용지원센터와 여성인력센터 등과의 사업 중복 문제, 경력단절 요인의 다양성, 전문직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불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이 필요합니다.

2009년에 1392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부문에 758억 3300만 원이 편성되어 그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비 지출 과다, 장기적 의무지출 사업화 가능성, 기존시장 교란 우려, 단순일자리 제공형 과다 등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735%가 증액되어 83억 5000만 원이 편성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은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3단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있으나 추진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되어 부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대상 범위의 축소 및 명확화, 2단계 프로그램 보강과 함께 사업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70억 500만 원이 편성된 자치단체 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나 그간 80%였던 국고보조율을 2009년부터 50%로 내릴 예정입니다.

매년 훈련 실시 인원 및 취업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매칭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사업계획 인원을 증가시킨다면 사업 실적이 저조해 질 수 있으므로 매칭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793%가 증액되어 50억 원이 편성된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올해 당초 예산의 323%를 증액하여 사업의 추진 주체 및 대상을 달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광역시·도 및 일부 시군구 등 효율적으로 시행 가능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실시한 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고용보험기금 411억 7000만 원이 편성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석박사와 변리사, 노무사 등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이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고용보험기금사업의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단계적 폐지를 위해 일부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에 142억 9500만 원이 편성된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 지원사업은 대학의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일회성 취업지원 행사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 폐지를 위해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으로 총 146

역 1300만 원이 편성된 종합직업체험관 사업은 초·중등학생들을 주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밖에 직업진로 교육 투자와의 예산투자 우선 순위 문제, 사업 기본개념의 한계, 유사 사례의 비측적성과 모델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 향후 운영 계획의 미비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반회계로의 이전사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169억 1000만 원이 편성된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사업은 일부 사업장에 중복·집중 지원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일부의 소수 사업장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사업은 앞서 언급한 산업재해예방사업비의 증액 필요성과 함께 산재보험료 반환금이 939억 8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반환금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증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정부출연 중단, 복권기금 전입 감소 등 재원 감소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가 심화됨으로써 직접급부사업을 줄이고 수혜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어 기금목적 달성이 어려워 보이므로 기금의 존폐 논의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동부 소관의 수정예산안은 총 12개 사업에 6092억 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노동부 소관 수정예산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돌발적 상황에 대응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전준비 미흡이나 추진역량 부족, 훈련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지원 청년인턴제와 비정규직 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저소득층 취업지원패키지 사업 등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먼저 정부지원 인턴제 사업은 당초 287억 원에서 975억 원이 증액된 1262억 원이 되어 지원 인원이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예산 증액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 채용 후 6개월 기간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486억 원의 예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 실업자 훈련사업과 전직 실업자 취업훈련 사업에 총 1031억 원이 증액되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칫 훈련수요가 예산 규모를 따르지 못할 경우 훈련기관 위주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져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사업 및 예산 관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9년 고용보험기금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99억 원이 편성되어 있던 비정규직 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에 257억 원이 증액되어 총 35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앞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상에 법적 근거가 없이 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으로 이번 수정예산안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적·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성공 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9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의가 있으나 경제위기 시의 대책사업으로서 관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 대상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민간 위탁기관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사업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정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당 김상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즘 아침에 다들 신문 보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듣기가 굉장히 겁이 난다고 할 정도로 앞으로 우리 한국경제에 정말 불황 쓰나미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관님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세우셨지요? 그때 상황이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최초에 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

○**김상희 위원**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수정예산안 전예산안을 보면 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안이한 인식하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랴부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지적이 되다시피 상당히 졸속으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세계경제나 한국경제를 예측을 하면서 예산안의 새로운 수정,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다시 이 시점에서 또 새로운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면……

○**김상희 위원** 지금 현재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저는 노동부 예산의 확충과 전체적인 국가 예산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수정할 때에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대체로 경제가 한 4% 정도 유지되게끔 생각하고 20만 정도의 신규……

○**김상희 위원** 한 4%는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가 없을 때였지요. 이렇게 폭발되지 않았을 때였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나 이런 정도의 어려

움을 예상하면서 대체로 4%를 유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목표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훨씬 더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리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런 실업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어려운 취약계층의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SOC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기 국면에서 직접적인 생계 대책을 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SOC에 투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겁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1920년대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동부의 예산이 대폭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 수립시기가 그렸고 수정예산안도 제대로 계획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는 전제에서 국회와 그리고 각 부처가 노력을 해서 이번에 예산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 예산만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확충시켜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노동부 자체에도 과도하게 증액된 예산이라든가—이번에 수정예산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그리고 검증이 덜 되어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 받았던 예산들 그리고 급하지 않은 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는 예산들 이런 것을 감액을 하고 위기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김상희 위원**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 필요성 느끼시지요?

‘예, 아니요’만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와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저는 노동부장관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부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또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

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위기 국면에서 노동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추가로 편성한 예산 중에서 실업급여의 확대 예산 부분은 너무나 근거나 타당성이 불명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원안에서 대폭 확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이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청년 지원, 청년이나 청소년 취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아니면 굉장히 문제 있게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 뻔한 예산들은 오히려 축소해서 제대로 집행될 예산의 증액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효율·미검증 예산으로는 글로벌 취업 예산이나 청년인턴제가 1262억으로 신규로 대폭 확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이거 한번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노동부가 수정예산안을 하면서 줄속으로 했다는 것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62억 원 이 부분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를 하시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예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이 길게 지적을 했지만 지금 고용보험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법적 근거 없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용보험 부분에서 실업급여 부분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에 관한 급여기간을 저는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연장을 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출하지 않아야 될 예산들은 대폭 일반예산으로 가져와서 이것은 예산을 확충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제대로 쓰고 기간도 확충을 하는 그런 부분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이번 예산은 실업 문제, 실업자에 대한 문제, 고용 유지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부분으로 예산이 대폭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없는 교육이라든가 지원 예산들이 아주 소폭 있으면서 핵심 부분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지금 2년 기한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점 아닙니까? 저는 노동부장관께서, 노동부에서 지금 계속 브리핑도 이것을 연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들어 보이며)

노동부에서 이것 조사한 거지요? 제가 한겨레신문을 봤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에 맡겨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 66%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2년을 경과한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을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고, 급기야는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다음번 현안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은 이렇게 실업자에 대한 지원, 고용 유지와 확대를 위한 것, 그리고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예산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보험을 깎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을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법 대응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 예산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여러 가지 말씀을 주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으로 볼 때 다소 줄속 편성이 아니냐, 주먹구구식 편성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이 예산 편성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실업사태랄까 여기에 대비한 구조 틀 속에서 그 예산안을 갖다가 전체

적으로 증액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김상희 위원** 장관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변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핵심적인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핵심적인 질문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제가 지금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희 위원**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용보험을 자꾸 파먹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일반예산을 확충을 해서 하라는 부분, 고용보험 부분은 실업급여의 기간 연장 이런 방향으로 바뀌야 된다고 하는 부분,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 부분에 관해서 단순히 기간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김상희 위원** 정책이,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충분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을 아직 적극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마는 저희들로서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예산에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지 마세요. 지금 장관께서는 비정규직을 4년으로 연장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예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

○**김상희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깎아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일반예산 뭐 갖고 왔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고용보험을 깎아 먹는다는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상희 위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매년 계속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전

적으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 지적에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상희 위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예산을 대폭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지금도, 그동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겁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는 바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짜여져 있고, 수정예산은 줄속으로 짜여진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을 줄속이라고 표현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노력을 했지만 어려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바꾸자고요. 그리고 노동부가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대폭 예산을 확충하고, 위기에 맞는 노동부의 역할을 하라는 말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좋은 지적 해 주신 것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감액해야 될 검토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에 지금 50억 책정되어 있는 것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것 중심으로 하면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취업 인턴제, 그다음에 종합 직업체험관 관련 사업, 창업점포 지원 용자사업, 글로벌취업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감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확대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드시피 실업수당 문제, 실업수당의 기간 연장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직업상담원의 확충, 노사 협력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문건으

로 다시 제출을 하고 이따 추가질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이번 노동부 예산, 정부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은 어쨌든 세계 경제위기나 앞으로의 경제 예측과 관련해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예산이고, 특히 노동부는 앞으로 위기 국면과 관련해서 대폭적인 예산의 수정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전담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마는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산재보험기금 15조를 운영하면서 금년에 주식 투자 비율을 늘려 가지고 2008년 8월까지만 3700억 원의 평가손실을 입은 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기금운용전담팀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아마 별다른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박대해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현재 전담팀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약직 사무관 1명, 전문요원 4명의 증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대해 위원** 지금 국가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여유자금 규모가 1조 원을 초과하는 기금에 관해서는 전담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전담팀을 두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담팀을 좀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지금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에 노동부 기금보다 훨씬 적은 한 1, 2조 정도의 여유자금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4급 과장 한 사람, 그다음 5급 사무관 2 사람, 이런 규모의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

민연금의 경우에는 6실 13팀의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기금운용본부장 이하 100명에 달하는 직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국민주택기금은 주식을 1.8%로 제한하고 정기예금 등 확정상품 비율을 늘려 가지고 보수적으로 운용을 한 결과 금년 9월까지 연 환산 약 600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조직을 줄이는 이런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극히 작은 인력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리스크가 커 손실이 일어난다면 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취지와 방향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는 빨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 조직을 늘리기 어렵다면 전환 배치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빨리 전담팀을 구성하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다음은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업점포지원사업에 금년에 얼마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산 총액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됐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아마 140억 정도가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현재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00에 육박하던 코스피지수가 1100으로 딱 떨어지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비자 소비 급감, 또 기업 구조조정 등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 여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나 되는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마는 한 20% 된다고 그렇게……

○**박대해 위원** 한 26%, 27% 가까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 26.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약 85%에 이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창업자 10명 중에 8, 9명이 망하고 한두 명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명퇴 후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재취업은 포기를 하고 퇴직금에 전 재산 털릴 털어가지고 힘들게 가령 치킨가게 같은 것 차려 놓고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하고, 특히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바로 피해를 입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삶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매출 규모는 올해 초에 비해서 30.7%나 감소를 했고, 궁여지책으로 직원 대신 가족을 참여시켜도 인건비도 남지 않는 사례가 68.7%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정부가 시행한 직접 창업지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보다는 직업훈련사업의 비중을 더욱 높여서 재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도 근본적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창업점포를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 장기실업자라든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등을 고려해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 심의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다마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장관의 노조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대해 위원 며칠 전 지난 월요일날, 3일 전이죠, 그러니까 10일날 본 위원이 주최를 해서 외국인고용허가제…… 지금 노동부에서 일원화를 시키겠다, 중기협으로, 민간으로, 이것이 옳은 방향이나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관님 잘 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 이 공청회를 열기 전에 노동부의 담당하는 분하고 우리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공청회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겠느냐 물으니까 ‘아주 좋은 거다, 노동부의 정책을 국회의원이 직접 이렇게 여론 수렴 과정

을 거치면 정말 좋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직접 이 담당관이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름을 밝혀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과의 서기관 김연식 씨란 분이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 토론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다섯 분이 패널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장관님 보고받아서 잘 아시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대해 위원 그런데 월요일 날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그전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참석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노조 조직국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산업인력공단의 노조 조직국장이, 산업인력공단도 노동부의 산하기관이고 현재 노조 조직국장도 성남지청의 차장이고 그래서 현재 직원입니다, 노동부 직원입니다.

그런데 못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장관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참석을 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장관님이 미안하다 하면서 참석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대해 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노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참석을 못 하게 했는지?

○노동부장관 이영희 당초에 위원님이 주관하신 공청회에 물론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 드리려고 생각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토론자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협력해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의 주제가 그냥 일반 외국인 고용 문제가 아니고 산업인력공단에서 행하고 있던 사업 일부를, 사용자와 관련된 부분을 이관하는 문제가 주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을 때 저희들 노동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물론 인력공단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와 조금 견해를 달리한다든가 보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희들 아무런 제약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박대해 위원 아니, 장관님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보니까 인력공단에서 담당자가 나오지를 않고 노동조합 간부가 나와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노동조합이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신문에다가 산하 여러 노동조합단체와 함께 노동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대단히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앞으로도 노동단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라는 이 업무는 노동조합이 하는 고유한 근로조건 업무와 대단히 무관한, 기본적인 하나의 정부 정책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더구나 전혀 논의되지 않던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나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서……

○박대해 위원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산업인력공단도 노동부 산하기관이고 노조 조직국장이 노조 전임자가 아닙니다. 현재 하상진이 분이 성남지사의 HRD사업팀 차장입니다. 그리고 왜 이 분을 택했냐 하면요 이 분이 2004년 2월 달부터 2006년 12월까지 외국인고용지원팀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일반 민간으로 돌리려 하는 그 사업을, 옛날에 고용허가제 할 때 제일 잘 알던 분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노동부에서 지금까지 산업인력공단과 중기회, 건설부가 하던 것을 민간으로 일임하겠다는 이런 걸, 그때 아마 발표를 했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대해 위원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안 맞다 이렇게 노조 중심으로 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 성명서 발표했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제 개인 일이 아닙니다. 제 집안 일입니까? 아님, 노동부 정책 이게 맞느냐 아니냐, 많은 국민들이 공청회를 하면서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런 자리에 지

정된 사람을 장관이 나가지 마라, 노조에서 나오는 것 못 나가게…… 장관으로서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장관님, 제가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라든지 감사 때 다른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열 올린 적 없고요. 또 어휘, 용어 선택 하는 데도 아주 신중하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장관님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치단체장하면서 10년 넘게 감사를 받았고 또 질문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의 고충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장관님이 저 개인 박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무시라든지 이걸 넘어 가지고 우리 환노 위원들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날 추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고, 정진섭 간사님 강성천 위원 오시고, 국회 재정위 서병수 위원장 오셔서 축사하시고, 열 몇 분의 위원들이 오셔서 앉아 있었고, 몇 분 위원들은 마칠 때까지 늦게까지 앉아서 경청을 했어요.

왜? 박대해가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노동정책이 정말 바로가고 있는지 이걸 듣기 위해서 왔는데 만일의 경우에 노조에서 반대성명을 내고 노동부 정책에 반대를 하면 오히려 몇몇하게 노동부의 그분이 나와 가지고 ‘이건 그런 게 아니다, 아마 산업인력공단이 잘못 생각한 거다.’ 그랬으면 다섯 분의 패널이 이거 누가 잘못 생각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장관께서 자기 산하기관의 노조 조직국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 밉다고 국회의원이 공청회하는 데 나가지 마라, 장관님 몰랐다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장관으로서 그 노동관이 옳은 노동관입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그게 맞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박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박대해 위원 그날 전북대학교에서 발제를 하시고, 패널 다섯 분 자리에 노동부 그 자리 비워

났어요. 왜? 장관님이 저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행여, 그날 시작할 때까지 그분이 오는 걸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서 가지고 저한테 묻기를 '저 자리, 노동부에서 왜 사람이 안 나왔느냐', 그게 뭐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일의 경우에,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주최를 한 겁니다마는 노동부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회의원들은 다 국민의 신임을 받은 전부 헌법기관인데 앉아 가지고…… 노동부에서 잘못된 것을 가끔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기도 하지만 또 협력을 하고 파트너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장관께서는 나가지 마라 했는데, 만일의 경우 앞으로 제가 아니고 우리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공청회를 한다고 할 때 비판하는 노조에서 나오면 이것 안 되겠다,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사전에 충분히 계획 단계에서 의견이 서로 조정되면 더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해 위원** 장관님 보세요.

지금 노동부의 산하기관인……

○**위원장대리 정진섭** 박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박대해 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보충질문 안 하고……

○**위원장대리 정진섭** 보충질의 룰에 따라서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때 하시더라도……

○**박대해 위원** 1분만 더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얘기하니까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고요. 입맛에 맞는 노조에서 나오면 내보내고 비판하는 노조에서 오면 안 되고 이것은 장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공청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이걸 파악해 보라, 이런 식으로 뭐 내려갔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박대해 위원**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대해 위원** 이것 만일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무슨 불법 집회한 거 아니잖아요. 노동부를 위해 공청회하는 데, 이거 인력공단 직원의 업무 영역입니다. 업무 연장선상에서 나간 걸 파악해라 이랬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말짓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만하고요. 동사안과 관련해서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사안의 투명하고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박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선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출신의 박준선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박대해 위원님께서 zoom 전에 공청회 관련해서 노동부장관이 소속 직원을 공청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박준선 위원** 물론 아까 사과를 하시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책과 관련해서, 어제도 최저임금제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공청회가 있었는데 공청회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노동부랑 힘을 합쳐서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다음에 노동부에 있는 장관님 이하 많은 실국장들이 또 패널로 참석하고 당사자이기도 하고 노총도 그렇고, 그런데 토론회 자체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가 참석을 하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한 심정은 노사정위를 지켜보는 노동부장관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시고, 그 뒤에 계신 국장님들 또 차관님도 장관님을 제대로 보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청소년들이 증인으로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장관님 기억나시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연소자 근로 조건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노동부에서 취해 오긴 하지만 여전히 여건이 열악한 것은 지난번 국정감사에 출석한 어린 청소년의 증언을 통해서도 봤고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2008년도에 이미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71.4%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4.9%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장관님이 점 알고 계시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리고 노동부에서 라디오 홍보 활동도 하고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효과가 여전히 제대로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TV 공익광고라든가, 최저임금 캠페인이라든가, 그리고 청소년들도 권리의식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용하는 영세 업주를 비롯한 고용업주들도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까 일단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노동부의 홍보와 단속뿐만 아니라 이런 청소년…… 물론 시민단체라든가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인권 향상을 위한 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노동부에서 좀 판단을 해 봐야 할 문제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노동부의 단속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에 대한 예산이 2009년 예산에 얼마나 돼 있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말씀하신 직접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좀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박준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통상적인 근로감독 체제로 그냥 해 왔습니다만 역시 청소년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흩어져 있어서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여러 청소년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해야겠다는 이런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까지는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이번 과정에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까지 채택하고, 물론 민주당에서 채택을 주장을 해서 채택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비록 정부에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노사공동채취업지원센터 예산이 2008년도에는 31억이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박준선 위원** 올해는 40억이 더 늘었네요, 71억 정도 됐네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노사공동채취업지원센터의 취업 성공률이, 전직을 지원하는 성공률이 절반(50%)에 달하는 아주 높은 실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걱정하시겠지만 지금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GM이라든가 실물경제 업체로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태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러면 실물경제의 위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직……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통상의 다른 연도에 비해서 실직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또는 전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예산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래서 지금 노사공동채취업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126%가 늘었네요. 하지만 이것은 서너 배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리 노동부에서는 특정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활동을 더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적으로 실업 사태가 나타날 걸 대비해서 전직훈련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큰 그림 속에서 보다 보니까 특정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앞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실업급여 예산을 당초보다 2700억 남짓 증액했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나라에 실물경제의 위축이 우려하는 만큼 안 되고 그리고 실직자도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이런 예산이야말로 늘어났다가 불용 예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의 예산은, 그동안의 사업에서 31억 정도 가지고 50%의 재취업 성공률을 보였다면 이 예산은 정말 몇 배 더 지원해서, 물론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면 되지만 실업급여라든가 재취업센터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추경에 편성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것을 좀 많이 편성해서 대규모로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안 그래도 실업자가 늘 것 같은데 기존의 실업자들을 거기서 전직을 활성화시키고 재취업 성공률을 7, 80%로 높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일단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취업지원센터에서 인력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해 내기에 상당히 벽찬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업무를 좀 더 하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좋은 활동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 민

간의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 그러니까 재취업이라든가 전직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을 공적인 기관에서…… 물론 잡코리아라고 취업 알선하는 인터넷 업체와 유사한 게 고용정보원인가 있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고용정보원이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민간의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용정보원이 활동을 해야 되고 예산도 취업 알선 이쪽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간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부분으로 쓰인다면 효과가 몇 배 있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동감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에는 노사파트너십 재정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2008년도에 35억이 배정돼서 29억이 집행됐고 2009년 예산에는 50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어요. 아시죠,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아시지만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 또한 훌륭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요새 보면 경제위기에서 노사 관계의 화합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역시 아까 실업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리고 지원을 효율적으로 좀 집행해서 노사분규가 사전에 없도록 그리고 노사파트너십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박준선 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과거의 집행 실적을 보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 비율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인 이상 기업체에는 6.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0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0.15%에 불과해서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의 사회적 파장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이 쓰이겠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는 노사분규에 대한 인내나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사화합이 생산력이나 이런 것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나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장 영세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다면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노사파트너십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은 현실적으로 노사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 쪽에 좀 더 비중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노사분규의 상당한 부분이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 쪽에도 이런 지원을 좀 해서 노사관계가 원만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워낙 수도 많고 하니까 전체적인 혜택을 다 생각하면 예산이 많이 요구된다 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증액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준선 위원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예.

○박준선 위원 나머지 준비한 예산 관련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시간을 30초만 더 달라고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노동부는 노동부의 일을 하고 환경부는 환경부의 일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일을 하지만 결국은 나라 전체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꼭 가져 주시고 예산의 수립이나 집행이나 이것은 매년 평화롭고 아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오면 되는데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동부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업 예산 기금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물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실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최소화되고 또는 구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의 선택과 집중, 예산 집행의 시기, 사업 예산의 경우에 상반기에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내년도 사업은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박준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박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입니다.

장관님 고생하시고요, 우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장관님의 철학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장관께서 노동 조건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7월에 민주노총 파업을 불법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있고 그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임금 인상입니다. 그런데 2009년 노동부의 성과 목표 첫 번째 내용으로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이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2009년 성과계획서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노동조합이 대단히 우리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노동조합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하는 기조는 아주 분명합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부가 조사한 비정규직과 관련해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께서 100인 미만 기업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66.5%가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꼭 다행스러운 일이고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자리 줄어든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지요. 사정이 이러한 때에, 아까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부가 기간 연장, 혹은 파견 업종 확대라는 이런 내용을 솔솔 연기를 피우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노동부가 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대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유도 정책을 같이 더불어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좀 지원해야 되고요.

그런데 2009년 예산에 정규직 전환을 유인하는 예산은 1원 한 푼 없습니다. 노동부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관계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말하자면 하나의 전체적인 제도를 정부가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라든가 하는 점에서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로서는……

○홍희덕 위원 어쨌든 좀 검토하실 시점이다 이런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위원 노동부는 2009년 예산·기금 편성의 4개 방향의 하나로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확산을 제시하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노동행정 종합 컨설팅 등 소위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101% 증가한 1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로 성격이 비슷한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793% 증가한 50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역 노·사·민·정 사업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역에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사업에는 TV 광고 등 홍보비로 2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업인 노사관계 선진화 홍보 사업에 16

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억 2000만 원에 비해서는 무려 1300%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고 진정한 노사협력 관계 형성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사용자의 노조 탄압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운영 지원에 26억 원, 우수 사례, 경진대회 3억 5000만 원, 포상금 14억 6000만 원, 해외여비, 홍보비 따라서 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 문제를 염려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한편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은 국민적인 공감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예산 규모로 본다면 우리가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본다면 이쪽 부분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서, 적은 예산이라도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 문제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잘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노동부 일반 예산은 전체 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회계가 10%도 안 됩니다.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사업비 비중은 노동부 지출에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가기관 건설 건립과 훈련장비 보강 사업과 같이 일반 예산으로 수용되어야 할 사업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금 사업으로 수행됨으로써 재정사업의 기금 의존도가 무척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용기금 등에서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신축공사비, 각종 청사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것, 종합 직업체험관 신축비 146억 원, 한국폴리텍대학 장비 확충비 512억, 한국기술교대 노후장비 교체비

108억 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2009년 고용보험사업 운영비 1052억 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 예산에서 일반회계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은 정말 항상 지적받아 온 문제고 저희들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고용보험 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실시된 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재정적인 현상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해 주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 비중이 좀더 커지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우리가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으로 411억 7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624명의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실업급여의 적자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5675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고용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신규 업종 진출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중소기업 전문 인력 활용 장려금은 전체적인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우선 사업 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을 충원하고 또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하나의 제도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바로 삭감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좀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요, 종합직업체험관 이것이 경제상

황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자 대란이 우려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인지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사협력 직업능력 개발 지원 사업이라는 거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희덕 위원** 노사협력 직업능력 개발 지원 사업,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23억 9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 예산은 50억 원으로 좀 늘려야 된다, 좀 알아보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및 산업 차원의 노사나 파트너 사업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노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현장의 노동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실시하는 유일한 사업이고 2007년에 비정규 근로자 등 3000여 명이 훈련받았습니다.

훈련 영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등 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지원 금액을 줄일 것이 아니라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건설 노동자, 섬유 관련 노동자들에게 정말 유용하고 사업주에게도 좋은 사업으로 기능 양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적어도 한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홍희덕 위원** 그다음에 각종 건설 컨설팅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부 컨설팅 사업의 효과가 매우 저조하고 여성 고용 확대 및 임금 피크제 시행하는 여성·고령자 고용 촉진 컨설팅 지원 사업의 경우에 2007년 컨설팅을 받은 9개 기업 중 6개 기업의 여성 고용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에는 19억 8600만 원의 컨설팅 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에서 올 8월까지 임금 피크제 컨설팅을 받은 17개 기업 중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3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결과를 보면 그런 컨설팅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런 고용의 감소라든가 이것이 실제로 최근에 경기가 악화됨으로써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이 근로자의 고용이랄까 또는 근로관계를 개선하는 등등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도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 우수업체 선발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우수파견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서 1억 1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아시다시피 파견제도는 사람장사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노예제와 다를 바 없는데 폐지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파견업체를 정부에서 양성하는 꼴이 되지요.

업체 선정 과정도 문제입니다.

선정 요건도 '파견업 3년 이상, 파견근로자 1000인 이상, 과거 3년간 영업정지 등 없을 것' 등으로 되어 있어 대형 파견업체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2008년 우수파견업체로 선정된 15개 업체 중에 일부 업체는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부에 피진정되기도 했습니다.

파견 우수업체 선정이 아니라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한 업체를 발굴해서 상을 줘야 합니다. 이게 노동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따라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대신 파견노동자 직접 고용하는 업체 선정사업으로 방향 선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파견업체 문제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묶여 가지고 저희들도 파견업이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의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파견업의 문제는 또 한편 먼 차원에서 새롭게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여러 인력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전문적인 인력

을 공급하고 또 지원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길게 볼 때는 오히려 그 산업이나 당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한편으로 그런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건전한 파견업체를 육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명심하겠습니다. 마는, 또 한편 파견업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문 시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드리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가지가지 이렇게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하시고 예산 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재윤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섭 위원** 한나라당 정진섭 위원입니다.

예산의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예산이 법률인데 우리나라는 예산과 법률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어떤 예산을 지출하라고 하는 법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장관,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어떤 예산을 '지출하라'라고 하는 근거를 법률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정부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를 반드시 갖고 있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주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기금 사용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동계의 사정 등이 복잡해서 이것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고용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범위를 확대를 해 놨습니다.

장관, 그 점도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정진섭 위원** 그래서 수혜자의 범위를 반드시 보험료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해 놓은 것은 법에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보험료를 낸 사람만을 위해서 정말로 꼭 써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가 다시 이 법을 개정해서 그동안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해 놓은 것을 재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보험료를 낸 사람 중에 어떤 분이 내가 낸 보험료가 다른 데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헌법소원을 해서 이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현재의 고용보험법이 유효한 것이다, 저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법적근거를 갖고 해야 된다고 하는 점은 저희들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한다든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 하나 하나가 모두 개별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면 그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고용안정사업 같은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넓게 생각할 때 장래에 고용 당할 근로자의 인력이라든가 양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부분은 고용보험법 목적사업에 말하자면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권한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이것을 해석하심에 있어서 실정법 주의를 조금 벗어난 해석이 됐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정말로 고용보험이 폭넓게 이용되려고 한다면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에 전입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도 돈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보험료를 낸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으로 전입을 하는 것을 ‘모성보호’를 제외하고 나면 단돈 2억, 이렇게 전입을 하니깐 이런 지적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정진섭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이 어려운 고용사정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헤쳐나간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에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장관이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고용보험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포괄적인 그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지금 실업이 매우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때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업에 대해서 충분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료를 가지고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진섭 위원** 이 실업급여를 몇 달치를 주느

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업급여를 연장한다 하는 것은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현행법에서 본다면 실업급여 기간이 3개월에서부터 8개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연장을 하려면 일단 이것은 법 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 걱정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대책은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의 숫자에 대비한, 말하자면 양적인 대비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에게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좀더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특히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워낙 단기 급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취업을 빨리 촉진해서 취업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실업급여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오히려 또 취업 의사를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상당한 검토를 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입법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 법률에 의해서 예컨대 외국처럼 4대 보험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세 일부 감면하는 효과가 사실은 별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용보험료 같은 것을 좀 감면하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 역시 입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미리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세 등 감면해 주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선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도 그렇게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존경하는 우리 홍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 굳이 어떤 항목을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긴 하겠으나 그것이 예산적으로 편성을 할 때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예산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문에서 삭감 등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이 또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해 놓으셨는데 산업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에서 8% 이상 예산을 쓰도록 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산업재해예방예산안 총 규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지출 총액이 7.8%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계산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8%를 맞춰야지 7.8%밖에 맞추지 못하고 0.2%를 깎은 이유가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동안 아마 환급금이 거기에 포함되도록 됨으로써 그것이 8%로 얘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환급금이 아니라 반환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사업기금에 관한 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오히려 더 좀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그것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좀 부진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대폭 확장을 했다, 그러면 정부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예산을 제출하실 때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노동부로서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집행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제출하신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이 청년고용인턴제에 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인턴제가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 분야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 가운데 이 인턴제 자체는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을, 종래에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반성을 해서 예를 든다면 우선 종래에는 인턴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개월로 연장을 하고, 또 다시 고용으로 넘어갈 때는 6개월을 더…… 고용지원에 대한 장려금도 우리가 책정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직업안정센터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과 관련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잘 관리를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상당한, 전과는 달리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것을 100% 다 집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십니까는 우선 내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볼 때 예산상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또 국민들에게 그런 면에서 안심을 갖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취한다는 자세를 갖고 임했습니다.

○**정진섭 위원**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근거해서 편성한 예산들은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행이 100% 되지 아니하면 그 잔액은 다시 기금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납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진섭 위원** 또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운용해 보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할 때 정부가 스스로 그것을 수정해서 편성·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기금 부분은 그럴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이 염려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도록 노동부가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알뜰하게, 또 100%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정진섭 위원** 또 한편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하나 좀 여쭙 보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등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이분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이 조그마한 사업들을 자영업 비슷하게 많이들 하게 되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자영업이 난립하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다 과당경쟁 속에서 무너지는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류의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보다 우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그나마 건실하게 사업하던 사람들에게 이 경쟁의 대열 속에서 또 희생을 당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심에 있어서 그러한 것까지 고려하셨는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회적 기업의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도 지난 국감 때 여러 번 중요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조금 방만하게 된다는가 목적을 잃게 되면 오히려 민간 부문의 시장을 교란할 수 있게 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부분은 일반 시장적 요인이 관여할 수 없는 환경이라든가 문화, 지역 개발 등 시장 수요 자체는 많지만 충돌이 적은 분야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만약에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경쟁적 요소가 있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감점을 한다든가 배제를 함으로써 민간 부문에 오히려 중복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께서 정부와 우리 국회가 함께 예산을 수정을 하자 이

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정진섭 위원** 정부는 이미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놓은 것이고, 이제 심의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국회에 있는 것이고,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우리는 정부가 소신껏 일하게 예산에 있어서는 그 편성을 소신껏 하는 것을 국회가 지원해 주고, 다만 그것이 잘됐느냐 안 됐느냐를 나중에 결산을 통해서 심사하는 것이 국회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는 장관이 책임을 지고 그대로 효율적으로, 또 그 효과를 100% 볼 수 있게끔 집행한다는 각오를 한마디 들으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효율적인 정부로서 예산상의 낭비가 없도록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의 균살을 빼고 그렇게 편성을 하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예산을 줄이는 방향에서 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워낙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6000억에 해당되는 추가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돈으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반드시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윤**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성 위원** 이윤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국회사무처 보고를 받으면서 텔레비전 모니터를 잠깐 보니까 우리 조용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아주 고성이가 오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왜 이럴까 해서 오디오를 잠깐 올려 보니까 우리 장관님한테 선비 중의 선비인 박 대해 위원께서 화가 아주 엄청 났던 모양인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취지는 결코 박 위원님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누를 끼치려고 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재윤 간사, 정진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윤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장관께서 ‘절대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 효율적으로 이번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표명하셨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가운데 경제를 전공한, 누구라고 하면 ‘아’ 할 수 있는 우리 동료 위원이 이번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부도 보니까, 저도 언제부터인가 노동부가 우리가 됐습니다. 보니까 6000억 원이 넘게 증액이 됐군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합니다. 환경부는 증액된 부분이 한 400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자, 증액이 된 이것 어디 쓸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져가서 써라’ ‘그냥 올려라’ 지금 이 형국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때 또 도처에서 한 건 하겠다라고, 그분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것이 하이에나처럼 덤벼든다 그런 분위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정말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지요?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곳에 쓰자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반드시 어려운 곳에 써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눠 먹자 이것 아니지요.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집행에 한 푼의 허심도 없이 써 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엄청난 돈이 그 부분에 지금 배정이 되는 것 같은

데 고용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사실 창출도 창출이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통계를 보셨을 겁니다. 3, 40대 쪽에서 실업자가 많다, 이것은 바로 고용 유지가 안 된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이윤성 위원 이런 분들이 옛날 IMF 비슷하게 지금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이것이 유행입니까? 창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내가 사실 시간이 있으면 여기 실·국장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일자리 창출이 뭐냐고? ‘뭘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까?’라고 한번 여쭙 보고 싶은데 내가 시간상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이 유행입니다. 어디 가나 일자리 창출…… 중요한데 고용 유지 면에도 좀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예산이 134억 원이 증액돼서 457억 원으로 수정 계상됐다, 그런데 최초에는 323억 원으로 2008년의 430억 원보다는 오히려 삭감돼서 편성됐다가 증액된 것이다, 이것은 증액되기 전에는 아예 여기에 신경을 안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고용유지의 중요함을 새삼스럽게 더 말씀 안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유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이 유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최근에 경제가 어렵지만 대체로 기업이 대량해고를 했다가 정리해고를 과감하게 단행했다는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위 정리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근로자에게 주는 충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해고로 가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 조치를 한다든가 어쨌든 고용을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윤성 위원 창출만이 아니라 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수없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년인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미스매칭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애긴지 아시겠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윤성 위원 하고싶어 하는 직종들이 몇 개 있는데 엉뚱한 데 자꾸 가라니까 누가 잡니까? 이것 좀 신경 써 달라는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이윤성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감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도 영향평가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게 나와야지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예산 배정하면서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계속 ‘못 한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노동부 스스로가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조금 오해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속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입법예고가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고용영향평가를 너무 확대해서 할 경우에 모든 정부 사업에 사전적으로 고용영향평가부터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타 부처의 업무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을 소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오해를 야기하는 발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고용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물론 아주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큰 예산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과가 이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 제도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성 위원 돈 없어도 된다는 생각, 이런 사

업에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된다는 생각, 아주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 다 공무원이네요. 자기가 20년 다녔던 길도 거기 포장 좀 하라고 그러면 용역 줍니다. 그런데 ‘이 정도야 돈 없이도,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제가 많이 조사해 왔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이윤성 위원 그 다음에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잡 닥터(job doctor)제도, 발음이 안 좋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좀 알아봤습니다.

○이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이윤성 위원 지금까지 불러다 놓고 과거 경험이나 얘기하고 인생상담하고 이것 효과 없습니다.

정말 요즘 ‘인생 70부터’ 하는데 경륜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주위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아서 그렇지. 조금 대우를 더 해주겠다든지 더 친절하게 그분들을 구하면 얼마든지 주위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닥터가 선생님이 돼야 됩니까? 꼭 닥터가 교장·교감 출신이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 다른 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던 것 같은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유사한 것으로서는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제도가 있습니다만……

○이윤성 위원 글썄 그것하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존심 상하더라도 벤치마킹해서……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윤성 위원 어디서 하는 것 보니까 전부 겹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전부 겹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는 과제를 드리고, 내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웃고 같

이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GM대우 간부들, 또 사장들 요즘 만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내달쯤 한 10일이나 보름쯤 공장을 조금 중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이윤성 위원 큰일났습니다. ‘대우’하면 인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 정현옥 보건국장도 계시긴 합니다만 여기가 이렇게 된다면 인천 큰일 납니다.

경인노동청장님 나와 있나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오늘 청장들은 이 자리에 배석을 못 했습니다.

○이윤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어떤 영향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를 보시고, 여기 또 우리 근로자한테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윤성 위원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님, GM대우 괜찮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경인노동청장했습니다. GM대우 괜찮겠느냐고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제가 질의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이윤성 위원 GM대우가 내달에 10일 내지 보름을 공장 문을 닫는다는데, 생산 중단을 한다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인천의 선도기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천이 괜찮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물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좋지는 않지만 당장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성 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왕 존함이 나왔으니까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산업안전보건국장이신 우리 정현옥 전 경인노동청장님께서 10월달에 서울로 금의환향하시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신 모양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인천은 왜 안 하고 앉아 있느냐’ 이래 가지고 불이 붙어 가지고 나만 만나면 이겁니다, 지원센터.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이 인천인데 전 경인노동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예.

○이윤성 위원 누구한테 그렇게 큰 부담을 남겨놓으시고 홀로 떠나셨습니까?

책임지시고, 더군다나 장관님은 그 지역 학교에서 교편 잡다가 오신 분입니다. 나는 충분히 인천에 대해서 알고 계실 분으로 알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웃고 지나지 말고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되겠는가, 어디를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초 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바쁜 시간을 쪼개어 대체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윤성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화수 위원님 질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안산 상록갑 이화수 위원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국방위원회에서 연락관 사무실 폐쇄시키자고 한 기사 보셨지요,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봤습니다.

○**李和洙 委員** 국회의원한테 잘못 보여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박대해 위원님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토론회에 노동부 직원이 다 참석하기로 했는데 참석 안 시키고, 노동부 산하기관이 꽤 많은데 엄밀히 얘기하면 산하기관의 업무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 다거나 아니면 상당한 누수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동부 업무는 노동부뿐만 아니라 산하단체가 단결까지는 뭐합니다마는 일치해서 효율적으로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李和洙 委員** 본 위원은 노동부, 그 다음에 산하단체를 오랫동안 접촉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의 의식, 노동자들의 의식수준도 바뀌었으면 역시 철밥통이라 자칭하는 공무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잘못하면 과감하게 제재하고 잘하는 분들한테는 상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꼭 장관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 여기 고급 공무원들 다 계신데 각자 반성 좀 하시고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

습니다.

산업재해 예방대책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에 따르면 아까 존경하는 정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 이상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으로 돼 있어요. 잘 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것은 빨리 좀 수정예산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째 산업재해율이 제자리걸음인데 산재율을 50% 절감하겠다고 하면서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8.5%에 비해 증액되지 못하고 낮아진 까닭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전체적인 예방사업비 자체가 준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 지적을 받아왔던 효과를 내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삭감하고, 말하자면 이 부분은 보다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좀 더 예산배정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산업재해율을 낮추는 부분은 저희들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우선 여러 가지 사업 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내년에 산업재해가 감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구호로만 감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더 파고 들어가 가지고, 특히 지금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3대 다발재해라든가 또 중소기업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세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 부분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런데 교육홍보사업비 예산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전년보다 14억 원, 8% 정도 감소되었는데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07년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점수가 미흡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李和洙 委員**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이 어떻게 설립된 건지 장관님 잘 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李和洙 委員** 이게 2006년도 11월 30일 그 당시 장관 합의문에서 노사발전재단을 조직하고 적극 돕겠다고 서명했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李和洙 委員** 그런데 예산이 계속 4년째 동결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서 충분한 반영을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러니까 한국노총 경총 상의 노동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재단인데 물가인상을 고려하더라도 4년째 예산을 동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도 금년 예산에 한 19억 정도 인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노사발전재단의 본래의 취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의 자율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또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좋은 여건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李和洙 委員**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동행정을 노동부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노사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관 주도로 해서 과연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정영역이 있고 또 노사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은 분명히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저희들도 발전재단을 통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발전재단 자체가 일단 노

사의 자율적인 이니셔티브가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和洙 委員** 그래도 장관님은 여느 분보다 조금 더 앞서가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노사는 노사가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함께 만든 노사발전재단이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계속 그래도 뭔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도 충분히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최소한도 인원보충 해서 한 19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李和洙 委員** 그리고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내역 중 법률구조활동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李和洙 委員** 제가 한국노총 출신이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깐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지 모르지만 노동부 산하의 직업상담원 임금의 70%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노총 상담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임금은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상담원 임금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간사, 김재윤 간사와 사회교대)

○**李和洙 委員** 그래서 예산 증액되는 것에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한 10억 정도 증액을 요청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다음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단기직무능력향상 JUMP 지원에 대해서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직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광범위하게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당정으로 저희가 협의된 사항은 한 40억 정도 추가가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李和洙 委員** 본 위원은 예산 지원을 자꾸만 요청하는 부분인데 JUMP 같은 경우는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소도시, 그러니까 한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 15개 정도로 해서 중소도시 그리고 노동자들이 밀집한 도시 이런 데도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JUMP 사업은 저희 노동부에서도 비정규직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모두 정규직과 같은 일자리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비정규직의 차별적 상황,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마는 또 한편 비정규직에 있는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은 수요가 많은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조업분야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확대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신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다음은 근로감독관 교육 민간위탁이 작년에 24명 교육하는 데 한 2억 5000이 소요됐거든요. 그러면 1인당 무려 1000만 원의 예산 지원이 있었던 건데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고려대학에 위탁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심화된 교육을 장기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별 감독관을 임의로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근로감독업무에 여러 가지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직무교육 강사 역할을 해야 할 수준에 있는 감독관을 보다 더 높은 훈련을 해서,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부분을 질적인 측면에서 강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일반 근로감독업무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李和洙 委員** 물론 필요에 의해서 실시했겠지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들만 비싼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나름대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李和洙 委員** 시간 17초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장관님, 요즘 참 신문을 보면 답답하죠, 그렇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답답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현실로 다가올 줄은 참 몰랐는데 일단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지금 경기 침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게 한두 달 만에 해소될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으로 되고, 경기침체가 되니까 은행의 BIS 기준율이 또 문제가 생기고 은행에서 대출은 안 해 주고 투자회수하고 자꾸만 투자가 감소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고용악화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장관님, 요즘 이런 현상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보다 더 답답하실 것 같은데?

○**노동부장관 이영희** 글썽요, 예.

내년도에 과연 어떤 경제적인 주름살이 근로자들에게 미칠까 정말 큰 걱정이고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줄여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예상 외로 커질 경우에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좀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 상황, 그러니까 평균 한 129만 원 정도, 정규직의 63.5% 수준에서 60.9% 수준으로 전체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결국은 그게 정규직화가 된 게 아니고 실직으로 가는 비율이 높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경기침체가 이렇게 어렵고 투자가 잘 되지 않고 정부가 은행보고 대출을, 은행에 돈을 풀으라 해도 그게 먹혀지지 않는 상황이 왔고 또 이렇게 되면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사업주로 봐서는 비정규직, 임시직이 가장 타깃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내년 7월로 되어 있는 그런 비정규직법안 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부분의 입장

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한 2년 정도 아예,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그나마 비정규직이라도 잡을 갖고 있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내년 초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합시다마는 지금 일자리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한 근로자 전체를 생각할 때 정규직 한 자리가 느는 것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도 자리가 2개가 더 느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더 원하는 사항일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일 자리를 찾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선 일자리라도 하나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일차적으로 비정규직이라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다시 해고당하고 또다시 간접적인 고용으로 격하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선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일차적인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원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고용기간을 부득이 좀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하게 임기응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4년 정도라도 우선 된다면 그러면 그 근로자가 4년 동안 그 회사에서 가령 일했다고 할 때는 상당한 인적인 숙련도가 되기 때문에 해고가, 오히려 더 채용할 가능성이 더 크고……

○조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한 한 2년 더 연장을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점프제도라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폭이 좀 넓어집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좀더 비정규직을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예산에도 비정규직 관련된 여러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가장 어려우면 가장 먼저 인원 감축하지 않습니까? 인원 감축의 대상은 뭘 합니다. 임시직, 비정규직, 특수근로자 그런 감축 순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축부분이 타깃이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노사상생의 입장에서 감원, 감축만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기업이 줄줄이 도산 상황도 올 수가 있는 입장에서는 좀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노동계도 그렇고 우리 여야가 시각을 좀더 바꿔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특히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지금 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와 같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바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정규직이 오히려 좀더 양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비정규직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양대 노조에서도 좀 협의가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노사정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노사정 부분에 대한,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각 지역의 노사정협의회의 예산부분 56억인가를 좀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더 대비를 해야 될 게 좀 안타깝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된다, 항상 경제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사대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예산들은 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오늘 현정택 KDI 원장 쪽에서 나온 비율이 성장률이 3.3%, 우리가 지금 3.8%에서 4.2% 정도 이렇게 정부에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3.3% 같으면 약 한 크개는 7, 8%, 9%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의 둔화라는 건 더 급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4%대하고 3%대의 차이는 엄청난데, 그래서 우리가 3.3%, 3.2%를 1%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10조 예산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추가예산 10조가 그 1% 올리기 위해서 10조 예산을 썼는데 결국은 상황들을 보니까 3.3%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외국 기관에서는 지금 2%까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체 노동계의 현상들은 어떻게 가느냐,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4.2% 정도, 열심히 하던 한 1% 올리겠다, 이렇게 한 4.2%로 희망적으로

잡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3.3%대는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 장관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지금 여기 노동부에 있는 관료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 예산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사업 부분 다 철회하고 또 단기적으로 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직접 가야 되고 또 일자리창출 문제라든지 저소득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선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4% 성장을 목표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 20만 명의 고용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그냥 객관적인 전망은 지금 3.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노동부에서 노동시장대책 관련된 내부의 고용특별 TF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저희들이 3.3%대 후반을 예상하고 지금 대체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보다 악화됐을 때, 3.3% 초반까지 경제성장이 올라가지 못할 때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또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또 한편 그런 아주 나쁜 상황도 미리 다 생각은 해 봐야 된다고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이 하루에 1만 명씩 실업자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파들이 오겠다,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미국이나 중국 이런 대규모 투자부분을 생각을 하고 경기진작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몇 가지 예산부분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진섭 위원님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고 고용보험 문제에서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 문제는 포괄적 법적근거로 봐야 된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봐줘야, 지금이 긴급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금 부분, 완전히 벗어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좀 유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전문위원이 낸 문제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 자활사업하면서 사실은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활사업에 이번에 처음으로 취업패키지지원이라는 그런 신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사업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동시에 좀 실시를 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를 파악을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지금 자활사업은 사실 오랫동안 해 봤는데 그 효과가 조금은 생각보다는 미미하다, 그래서 취업패키지지원사업은 예산증액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체당금 부분은 처음에 정부에다가 1979억 원을 올렸는데 104억 원이 삭감되고 1875억 원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체당금 부분은 결국은 체불임금에 대한 담보인데, 그다음에 체불임금이라는 게 기업이 도산되고 난 다음에 파산된 기업에서 나오는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주는 건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양이 좀 많아지겠다, 지금 여러 가지 현상으로 봐서는.

그러면 체당금 부분도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 이상으로 좀 증액을 해서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때 가서 추경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그냥 밀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대비를 했다가 안 되면 다시 기금으로 환급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당금 부분도 좀더 증액을 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리고 컨설팅사업 부분에서 141억 7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08년 대비해서 한 39.5%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4개 세부사업에 49억 7500, 그다음에 세부사업 포함된 7개 컨설팅사업에 9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컨설팅사업에 대해 좀더 종합적으로 문쳐서 할 수 없습니까? 보면 비슷한 사업인데 컨설팅비용의 단가도 다르고 말이죠. 또 이게 체계적으로 합쳐지지 않아 가지고……

○노동부장관 이영희 또 컨설팅 안으로 들어가면,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 비슷하게 할 수도 있으나 좀 전문영역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좀 다르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기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균등하지 못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원진 위원 여성고용확대 컨설팅, 임금피크제컨설팅, 여성·고령자 고용촉진컨설팅 지원사업 해 가지고 죽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걸 좀더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효율

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체크를 좀 해 주시죠.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통계의 문제, 왜 이렇게 우리 피부로는 실업률은 너무나 높는데 실업률의 통계는 왜 이렇게 낮냐, 이래 가지고 통계의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통계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통계에 상당히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경제생활인구 조사에만 통계를 집중하고 있는데,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근로자 쪽으로만 가구조사로만 하지 않고 사업체를 조사해서 그 사업체에서 빈 일자리가 얼마가 되고 새로 신규인력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조사하는데 지금 우리 대체로 통계는 그냥 가구를 조사로 한 공급적 측면에서의 조사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 산업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 노동부에서도 보다 사업체 중심으로 한 통계 조사를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원진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도, 제 개인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통계가 잘못 잡혀가기 시작하면 통계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성은 자꾸 떨어지고 예산정책이 잘못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통계데이터는 바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도 좀 선진국이 하고 있는 방법을 도용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좀더 정확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방법을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업체가 표본으로……

○**노동부장관 이영희** 한 6만 개 정도가 표본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위원** 6만 개 정도를 매월 조사를 하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사를 한다면 매월 하는 것이 상당히 정확하겠지요.

○**조원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수년 동안 얘기가 거론되고 국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도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부분을 좀 올려주시면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지 안 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윤** 조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조해진입니다.

조금 전에 조원진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아까 김상희 위원님, 홍희덕 위원님, 오전 질의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비정규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정부 방침이 나와 있고 한테 결국은 비정규직 가운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많이 전환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비정규직이라도 장관님 말씀같이 직장을, 일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관님이나 노동부가 다 목표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또 질의하신 우리 김상희 위원님이나 홍희덕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거든요.

그분들 생각도 역시 비정규직 중에 빨리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업체의 내부 여건에 따라서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직업을 안정시켜 주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자리라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려면 내년 상반기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이 사람들을 내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나, 아니면 잘라야 되나’ 하는 그런 결단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결단을 좀더 유예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재윤 간사, 정진섭 간사와 사회교대)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결론은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전체적인

효과가 더 나올 것인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더 많아지고, 또 비정규직은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고용의 질이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기초를 두고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아까 어떤 조사 결과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조사해 보니까 사용자들 60%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확인은 못해 봤지만 그런 베이스에 두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노동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런 논의의 베이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노동부하고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속 일방통행 식으로 막 이렇게 강조하고 밀어붙이고 하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과 그런 식의 논의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야 이게 소위 말하는,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가능해지고 논란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하시고 저의 생각도 전적으로 조 위원님의 견해에 같이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실증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이념적으로 이 문제를 찾는 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실제로 어떻게 있고 그 사람들의 고용 장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거기에 과연 다른 대책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논의한 결과라면 저희들은 거기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바로 채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사회적으로, 노동단체도 그렇고요, 이러한 문제를 정말 객관적으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해진 위원**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해야 되는 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다수의 사용자가 다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개 다 전환해 줄 거다. 그러면서 기존의 비정규직은 해고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갈 거다라는 객관적인 전망이고 실증적인 근거라면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보도된 3년 또는 4년 유예한다는 정부 방침이 사실이라면 그 판단은…… 그렇게 하면, 지금 법을 그대로 손을 안 보고 고수하면 정규직 전환은 별로 안 되고 또 그나마 있는 비정규직도 다수가 해고될 것으로 갈 것이다라는 현실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대체로 그 인식의 접근을 좀더 현실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한 군데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나 여론조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과연 기업이 데리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답변하는 거와 실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한 자료만 보고 낙관적으로 했다가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에만 입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 논의의 틀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에서도 그와 같이 실증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예산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번에 11월 3일 수정예산에서 457억인가로 편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 여러 고용 사정이 어려워질 것을 생각했을 때 충분한 규모라고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 방향으로 국회도 그렇고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종합직업체험관 신축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2005년도엔가 한 2305억인가 예산이 잡힌 이후에 속도가 빠르게 진척이 되어 왔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대체로 계획에 따른 진도는 유지돼 왔습니다.

○**조해진 위원**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거나 한 것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던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한 그런……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이월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불용돼서 다음연도에 편성을 해서 계속 집행해 왔습니다.

○**조해진 위원** 본래 잡혀 있던 원래 예산이 2305억이 맞습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중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가지고 한 오륙백 억 원이 지금 집행된 겁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현재까지 한 510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쪽에서는 실업자가 많은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데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올바른 직업관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직업관 형성을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취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 직업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기존의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전국적 시스템이 있지 않습

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단일 시설을 지어 놓고 거기에 학생들을 데려와서 견학하게 하는 것하고 그 효과가 어떨까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지금 학교에서도 직업지도교육·진로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학지도에 머물러서 진학지도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직업지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우리 직업상담원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직업지도도 해 주고 적성검사도 해 주고 흥미검사도 해 줘서 일부 직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큰 직업체험관을 만들어서 실제로 직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시설이 하나 필요하겠다는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이 되는 거지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고용보험기금의 용처가 굉장히 시급한 것도 많은데 이쪽으로 계속 집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맞는가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예,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인력수급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늦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 사업 수요하고 이 시설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하고 매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사회적 편익으로 보면 이 사업을 빨리 완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산재예방 예산 부분은 8% 기준에 좀 미달한 부분도 있고, 사업 내용도 내년, 후년에 예상되는 여러 상황하고 또 우리 노동부가 단기간에, 2012년까지인가요? 12년까지 산재율을 0.5%대로 낮춰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비하면 예산이 작년보다도 오히려 조금 줄어든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큰 틀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뚜렷한 방안을 가지고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묘안이 잘 떠오르지도 않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듯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런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요충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분명한 계획 없이 예산만 요구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제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요청을 분명히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사업계획도 좀더 차별화되게, 치밀하게 만들어지고 필요한 예산도 여지를 두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한국폴리텍 대학이 어려운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설인데,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의 기술을 배우는 곳인데 노후 장비가 많아 가지고 또 장비 사용 빈도는 더 많아져 가지고요. 직업향상 교육·향상훈련 때문에 사용 빈도는 많아지고 한데 교체가 빨리빨리 안 돼 가지고 가르치는 데도 또 배우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조금 더 줄었습니다. 원래 3년 예산으로 1128억 원이 해마다 376억씩 2년간 집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더 줄었는데요. 준 배경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에 따라서 신기술장비 확충 예산은 부득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 특성화학과에 대해서라든가 등등 지원이 12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폴리티텍대학 장비 확충에 지금 당장 애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는 폴리티텍대학이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굉장히 교육 수준이 괜찮다고 평가가 되어서 특히 청년들도 이런 실속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을 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유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장비 지원

같은 것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어쨌든 07년, 08년 2년 연속 376억인가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장비를 교체하고 확충을 했는데 올해는 한 92억이 빠졌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는데 여건이 되면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강성천 위원입니다.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제가 존경하는 박대해 위원님 공청회 자리에 갔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장관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 현장에 왔던 의원님들의 생각은 상당히 달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부 직원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대해 위원님이 흥분해서 가지고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의원님들이 여러 분 다녀가시면서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드리면서 앞으로는 노동부가 이런 평가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화수 위원님께서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관님 아시다시피 노사화합선언이라든가 무과업선언 기타 여러 가지 선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10억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15억 내지 20억을 더 증액을 해서 이런 노사화합선언이나 아니면 무과업선언이 나와서 어려운 경제를 노사가 함께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예산 책정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노사발전재단이 아까 존경하는 이화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4년 동안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아주 없어지든가 아니면 있으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노사에만 맡겨 놓고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됩니까? 바로 노동하고 자본하고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자고 하는 목적사업이 거기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 지원을 해서 이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한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다른 것은 지금 다 통폐합을 합시다라는 이 부분이 그 부분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제화시켜서 지금 어려울 때 이런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동부의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2년을, 3년을, 4년을 연장을 해서 과연 그때 가서 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연 지금 노사정위나 노동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노사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인데 여기에 현재 노동부가 예산을 쓰고 있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비정규직·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마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유인하기 위한 법인세감면제도 같은 것은 현재 법개정이 완료되어서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부의 예산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라는 그러나 일반회계 지원과 같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 개정을, 입법작업을 통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시다라는 지금 예산편성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산편성에 추가 예산이라도 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18일 결산심의 때 노동부 재정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산 시정요구의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다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래서 2009년 예산도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706억으로 5.1%, 기금이 19조 7157억으로 94.5%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2007년도의 재원구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결산심사 때 기금의 경우 기여가 있는 곳에 급여가 주어지는 시스템으로서 기금급여 부담주체를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존경하는 정진섭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일반회계를 통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그렇다면 지나친 기금의존도의 사업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본 위원의 지적이 그대로 2009년 예산안에도 적용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기본적으로는 강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그런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환될 수 없는 현실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일반회계가 좀 더 우리 노동부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더군다나 노동부는 기금 운용을 잘못해서 3000억 이상 넘게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아직까지 기금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런 예산편성은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기금 운용 손실은 어떤 평가손실인데요. 이것 자체가 우리 노동부 자체의,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만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큰 잘못이겠습니까라는 전반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저희들이 운용을 위

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해서 자산 운용에 관해서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노동부는 지난 10년간 노동 행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사실 게을리한 잘못을 하고도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하고 있으며 예산의 심의 확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과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국회의 권위와 권한에 도전한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의 국가 재정의 상황이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이 이런 예산 편성을 바람직하게 못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재원구조를 바꾸는 것이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0년 예산 편성 때에는 기금 의존도를 낮추고 일반회계 비중을 늘려서 책임 있는 노동 행정을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정진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의 중복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대책으로 중소기업 고용구조 자율 개선 지원, 능력개발카드제 확대, 주말·단기 고급과정 제공, 훈련생 생계비 대부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위 사업들은 모두 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능력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회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일반회계 예산은 별로 많지 않은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도 엄연한 재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는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노동부 예산·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니 명시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은 비정

규직 차별 지원으로 9억, 파견근로자 보호 지원으로 6억, 합해서 15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능력개발카드제에 대한 애초 2009년 예산 요구액은 얼마였고 기재부와 조정 과정에서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혹시 실무자가 대답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강성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138억이 예정됐으나 노동부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23억을 요구했고 22억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삭감의 경우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정말 특화된 사업도 없으며 그 실적 또한 좋지 않아서 삭감됐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왜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은 대체로 저희들 의욕은 좋으나 사업의 실적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당장 저희들 예산은 그해 당해연도에 제대로 충분히 못 쓰면 또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부 통계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조금, 그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할 수 있게……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조금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카드제는 저희가 52억을 요구해서 52억을 반영한 사업이고요, 다만 수강장려금 사업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됐습니다.

위 사업들의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고용구조 자율 개선 지원사업의 대상은 250개소입니다. 능력개발카드제의 대상은 2만 3000명입니다. 주말·단기 고급과정 제공(그러니까 비정규직 JUMP의 경우입니다)의 대상은 3만 명입니다. 훈련생 생계비 대부사업은 4000명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의 사업 대상이 몇 명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45명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내놓은 사업 내용들이 비정규직 560만 명에 대한 혜택으로 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560만 가운데는 비정규직의 내용이 기간제 근로자도 비정규직이고 또 파견 상태의 근로자도 하도급을 하고 있는 근로자, 이 모든 다양한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래에 뭐랄까요, 임시직으로 있던 그런 일고·임시고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범주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각종의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또 이걸 다 포괄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그런 것을 다 커버 할 수 없다는 건 제가 자인을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금 경영계 의견에 치우친 비정규직 재개정 논의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나온 4개월 이런 등등해 가지고 장관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지금 노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될 만한 내용도 없고 단지 몇 프로에 불과한 근로자에게 카드나 나눠주고 대부사업이나 해서 그 불안감을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장관님, 지금 당장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라고 하면 금번 경제난국 극복 종합 대책 때와 같은 줄속예산이 편성될 테니까 현재 예정돼 있는 비정규직 차별 지원 등의 예산을 늘리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앞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역점을 뒀야 될 부분은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해소, 차별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

울이겠고요, 또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증액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2년, 3년, 4년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가서 어떻게 또 대처할 것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서, 지금 어려울 때 이 고민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노동부 그리고 노사정, 노사가 모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서는 노사정과 함께, 그리고 노동계와 경영계를 총 망라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권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택 위원** 권선택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예산 부분 물어보기 전에 현안 몇 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타이어, 잘 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권선택 위원** 또 사망 사건이 있었지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권선택 위원** 원인이 파악되나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원인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망, 최근에 사망한 사람은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사무직으로 종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생기게 되는 질환과 조금 다른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글썄요, 그건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지금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부검을 해서 사망 원인을 아마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선택 위원 결과 언제 나오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마 그렇게 늦게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하여튼 그 결과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현장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한국타이어 문제 자체는 그동안에 많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질병의 원인이랄까,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여러 차례 조사도 한 바가 있고요, 또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가 보시고 문제를 제기하시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계속 논란이 되니까 노동부에서 재발 방지를 비롯해서 종합적인,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국감 때도 추가 역학조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추가 역학 경과에 대해서, 조사 경과에 대해서는 산업국장한테 좀……

○권선택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입니다.

내년 3월까지 목표이고 지금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환경 측정을 지난주쯤 마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조직문화나 작업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 대상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부터 근로자집단하고 집단토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러니까 추가 역학조사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개시된 겁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예?

○권선택 위원 개시가 된 거예요, 본격적인 조사가?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예.

○권선택 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난번에 논란됐던 것이 근본적으로 봉합이 되는가요? 그것이 봉합되는 겁니까, 이것만 끝나면?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논란이

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조사는 끝났고요.

○권선택 위원 그렇지, 물론 끝났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지금 하는 조사는 아시다시피 흠이라든지 몇 가지 특정 유해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에서 특수한 조직문화나 이런 것이 혹시 스트레스를 과중하게 주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내년 3월까지의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좀 비협조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데 계속 설득 중입니다.

○권선택 위원 그게 무슨 뜻이지요? 어디서 그렇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지금 조사 대상이 한국타이어만 있는 게 아니고 넥센하고 금호타이어가 있는데 금호타이어가 조금 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 설득 중입니다.

○권선택 위원 어디 공장입니까, 거기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금호타이어요?

○권선택 위원 예.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광주……

○권선택 위원 광주?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옥 예.

○권선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지지요.

장관님, 그리고 아침 보도인가 보니까 비정규직 고용기간, 법안을 3년 또 어디는 4년 이렇게 나오대요.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제 여러,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그냥,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다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제시한 걸로 생각하고 그런 것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수렴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지요,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내년에 올 사태를 생

각한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지금쯤에는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방법상으로 저희 정부가 법안을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마는 그 경우에 특히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거치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에서는 좀 시기가, 진전 속도가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물론 의원입법이냐 의원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부에서 소신을 갖고 확고한 합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또 정부가 소신을 물론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또 너무 소신을 강하게 하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평을 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권선택 위원 노·사·정 합의된 틀 내에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러면 오늘 신문에 난 것은 추측성 보도라고 봐야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이 있네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권선택 위원 이게 수정예산에서 증액이 된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과거에 99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이 되다가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때 왜 폐지되었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때 이 사업이 충분하게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측면보다는 본래의 목적과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좀 충분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이번 것은 6개월분을 주고 과거에는 3개월분을 주고 그렇게 했네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실질적으로 내용을 좀 강화하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취업지원센터 쪽에서만 하지를 않고 청년들 같은, 전문 그런 기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더 효과를 올려야겠다고 하는…… 저희들이 그동안 특히 청년실업대책을 여러 번 많이 대책을 강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청년실업대책을 한다는 것은 취지에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과거에 있었던 부작용,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확실하게 이것 가지고 완전히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성공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하여튼 돈만 쓰는 정책, 효과는 없는 정책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러시고, 중소기업유급휴가훈련·대체인력지원 사업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권선택 위원 이것이 대선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권선택 위원 이것도 관련된 법 시행령 이런 것이 개정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행령 가지고는 안 되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 시행령 개정을…… 이것은 이번 국회에 의결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

고 개정 작업을……

○권선택 위원 법이 바뀌어야 되나요? 시행령 아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시행령만 바뀌면 됩니다.

○권선택 위원 시행령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사업 중에 유급 휴가훈련지원 사업이 따로 또 있네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권선택 위원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한 사업인데 하나는 70% 지원, 하나는 20%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혹시 모르면 차관님이 답변하시든지……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 조정호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경우와는 설계를 달리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는 좀더 지원을 충분히 해 주기 위해서 지원 사항을 달리 정했습니다.

○권선택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두 개 다?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조정호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은 유급휴가훈련이 있었습니다.

○권선택 위원 있었어요?

하여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조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또 각종 컨설팅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동부가.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권선택 위원 14개로 되어 있지요? 총 167억입니다, 각종 컨설팅 사업이. 그런데 일관성이 떨어지고 집행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사사업은 통폐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과 또 유사한 경우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리고 장기실업자 등 창업점포 지원 사업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권선택 위원 140억이네요.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원이 되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날것인지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 어떠세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2005년도 보니까 729명을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375명이 폐업을 했어요. 그렇다면 돈만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신하고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사업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것이 맞겠느냐, 오히려 좀더 지원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권선택 위원님, 시간을 아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차 질의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김재운입니다.

어제 통계청이 2008년 10월 말 기준 고용동향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마침내 심리적 저지선인 10만 명 이하로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었는데요.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침체가 되고 또 이러면 고용이 악화되고 또 내수가 부진하고 침체가 가중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실업자,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 포함하면 체감청년실업률이 15.4%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자리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데요. 물론 노동부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래서 사실 충분치는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을 수정해서 6000억에 가까운 금액을 이런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재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KDI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경기 악화는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예산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지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2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경제성장의 효과로서 또는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낸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게 기본적으로 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로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재가 죽 예산을 검토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특히 지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에서 예산을 183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마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보다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우리 노동부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일부씩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직접고용 창출에는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도 그동안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재원에만 의존하는 단기성의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지속성은 못 갖는다, 그래서 저희들 노동부에서는 이런 사회적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연계형 일자리로 발전시키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하나의 모델로 나아가도록 해서 저희들은 내실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또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그 자체를 확장해야 된다고 해서 좀 추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지금 경제 위기가 닥치면 여성 가장이 굉장히 타

격을 많이 입는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성 가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소외계층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여성 가장이 가정 경제의 책임을 지게 되면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위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제 위기일 때 가장 취약한 층이 어디인가를 노동부가 잘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창업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신규고용촉진사업에서 여성근로자를 위한 부분이 있었고 또 앞으로 여성부와 관련된 다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만 뚜렷하게 여성 가장에 대한 항목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대단히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이 부분은 예산항목을 챙겨 가지고요. 예산심사소위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오늘이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이 땅을 떠난 지 38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차별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비정규직의 문제가 또다시 우리 사회와 우리 노동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세를 1인당 30만 원 감면해 주는 것이 하나의 인센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1년에 법인세를 얼마 감면해 준다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1인당 30만 원입니다.

○**김재윤 위원** 1인당 30만 원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재윤 위원**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제 위기일 때는…… 뉴딜정책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끊임없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서 결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데 비정규

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정부가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뭐 전적으로 그 점에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김재운 위원** 특히 30인 이하의 기업, 사업장의 이런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매우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을 연장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바람직한지 잘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용 불안이 없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과연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건 저희들 노동부로서는 정말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적 개념으로 하나의 ‘부당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정되어야 할 면으로서 차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근로조건이 차이가 난다면 그거는 차별로 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제도가 지금 사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구제를 신청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볼 때 그런 구제 신청이 들어와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의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정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은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은 한 사업장에 있지만 직종이 다르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피하게 어떤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큼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그런 격차가 좀 줄어들도록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의 과제는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 기간 연장의 부분이 혹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많이,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데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정규직이 비정규직화되고 파견기간제화되고 계약 해지, 이렇게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사업장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청년인턴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실질적인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다소 본질적인 방법이 못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중소기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쪽에 취업을 하려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선 그쪽에 가서 인턴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한 6개월 노동 경험을, 직장 경험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용자 쪽에서도 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게 된다면 6개월 더 장려금을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턴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하나의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합니다마는, 다른 근본적인, 보다 실효성 있는 취업대책이라는 게 사실 여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청년들의 기대심리를 낮추어야 되고 무엇보다 미스매치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당장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여성가장의 일자리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취업 취약층의 한 분야가 또 어르신 분인데요. 고령자 고용지원 사업 예산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이 무려 29억 1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오히려 증액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좀더 활기 있게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을 씬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이 예산이 집행되거나 예산이 수립되는 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는 물론 안 되겠고, 또 저희들이 해 온 사업은 대체적으로 그런 법 테두리 내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상 올려 놓은 것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하고 올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 사업에 어떤 기금 예산을 함부로 임의적으로 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노동부의 예산이 굉장히 기금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국회의 예산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미비하거나 또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법적 근거를 항상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근로기준법상 휴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잠시 쉬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정진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첫 번째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겠고,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너무 성급하게 해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법적 근거 없이 나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이번에 조정을 하는 걸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 기본입장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숙고 끝에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입장, 우리 정부가 제출해 드린 안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보험사업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됐었고, 이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이 제대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좀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자와 체불임금이 비례해서 증가할 거라고 하는 걸 예상하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체당금과 무료 법률구조 지원비도 이에 상응해서 증액되어야 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예

산으로는 1875억 원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이 1875억 원으로는 정부에서 낸 수정예산안에 나타난 실업급여 증가 추이에 준하더라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도 실업자에 대비해서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실업자를 안 내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유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금보다…… 지금 457억 원 하셨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김상희 위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무급휴가 지원 등과 같은 일자리나누기 사업들 있지요? 이게 사실 IMF 때에 나왔던 정책들 아닙니까? 이 부분은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은 지금 현재 법인세 감면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를 낼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못 내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고 통 분담을 같이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어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마땅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 시 월 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최소한 총 10만 명 정도의 신규 지원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서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연장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연장보다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 문제를 걱정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권고를 해 주셨습시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월 50만 원 정도를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럴 때 그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고 피 불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낭비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열거해 놓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부 차원의 주요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시설 건립 문제, 지금 보니까 산재예방시설 건립에 81억, 종합체험관 신축 부분은 지금 5차 연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용보험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146억, 근로복지공단 42억, 산재보험시설 건립 36억, 정보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화 사업도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연기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요, 지금 노·사·민·정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방정부에 보조금 주는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 사업은 매칭펀드식입니다.

○**김상희 위원** 보조금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정부에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과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김상희 위원**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상희 위원** 일단은 법적 근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사·정 협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국감 때 지적됐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제 기능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전혀 변함이 없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가지고 사회적 통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통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부분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해야 될 사업으로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 9월 실적으로는 사업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고용평등 관련해서, 그리고 또 고용지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적을 많이 낼 수 있고, 그리고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 이게 지금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억 8300만 원밖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고, 인원은 45명입니다.

저는 이것은 그동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정책이 좀 제대로 집행될 단계에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노동부에서 고용평등사업, 그리고 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확충해야 될 사업과 감액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문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만 제가 김 위원님 질문하신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진섭** 그렇게 하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예산 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말 줄여야 된다는 점에서 삭감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장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실업과 앞으로 올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것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직업체험관 같은 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워낙 처음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실 때 하나의 지속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중단해서 다시 또 재개하게 될 때

는 엄청난 실질적인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노사정위원회 발전은 필요하지만 노·사·민·정 협의체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 지금 실질적으로 노·사·정 또는 노·사·공, 이것이 활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우선 각 지역에서 그 지방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그 지역의 고용문제라든가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노·사·정의 원활한 작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초로서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의 노사협력입니다. 사업장에서의 노사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앙에서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밑에 전달도 안 되고 효과가 작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협력과 증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장관님, 김상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정부에 대해서만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장관님의 그러한 말씀도 소위원회에서 차관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다음은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비정규직 장학금 50억 원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자를 가지고 하니깐 205명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수혜자가 특정단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런 반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하던 저소득근로자의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 이것은 전년 대비 35.5%에 해당하는 33억 4900만 원이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 있는 사업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소득근로자 장학 부분은 교육부의 장학사업과 중복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된 부분이고, 그다음, 비정규직 부분의 장학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비정규직 자녀를 수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노총계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체로 보면 조직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접 효과가 가도록 그렇게 설계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노동부장관 이영희** 알겠습니다.

(정진섭 간사, 김재운 간사와 사회교대)

○**홍희덕 위원**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업무가 노동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정부가 주장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좀 독립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예산편성과 인사권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노동위원회 업무가 기본적으로는 판정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업무가 들어가 있는데요, 조정업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행정업무와 유사한 내용을 행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판정업무고, 판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나의 판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이나 이런 등등에 개입하거나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으로 본다면 노동위원회가 하나의 독립적 기구로서 노동부로부터도 더 벗어난 하나의 노동법원과 같이……

○**홍희덕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

기에 대한 고려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필요성보다는 아직까지 시기가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홍희덕 위원** 시기상조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노동부가 후원한 외국 투자기업 노사정 포럼 열린 것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여기에서 류성민 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 기업인들이 기업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행정절차 및 정부 서비스,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 19.7%, 다음으로 한국 내의 시장 상황에 16.7%,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데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시장상황이며, 복잡한 행정절차 및 조세제도가 상당한 경영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정적인 국내 노동상황에 대한 대외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실시하여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노동상황 알리기 사업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위원** 1억 5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타당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것 좀 삭감해서 외국인 노동자 권리 안내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지……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실제로 문제가 많습시다라는 국제기관에서 현실보다는 좀 지나치게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어떤 실상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을 별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고용기금과 산재기금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 본 사실이 있지요? 현재 10월 말까지 각 기금별 손실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다른 직원한테 확인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것, 특히나 우리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돌아갈 이런 기금을 함부로 이렇게 투자해서, 물론 불리기 위해서 했겠지만, 이런 손실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다음에 언론 모니터링, 보도 분석, 블로그 관리에 대한 위탁사업인데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7200만 원인데, 하지만 이 일은 노동부 대변인실 등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치관이 들어가는 보도 분석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지금 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노동부대변인 송봉근** 대변인 송봉근입니다.

모니터링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매일 각 신문·방송을, 또 노동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노동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단위로 하고 있고요, 또 연 단위로 하는 것은 객관적 기관에서 부문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홍희덕 위원** 예, 많지는 않아요. 나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대변인 송봉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평가작업만 하더라도 매일 평가하고, 주간 평가하고, 이 평가를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정책의 어떤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하고 정부 지원 청년인턴제 신규로 하는 것,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나름대로 의견과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윤**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 국회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산이 올라 온 것을 보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증액을 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석면 해체·제거 근로자 보호장비 지원을 위해서 53억 원, 또 석면 해체·제거 등 위해물질 취급 건설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19억 4000만 원, 그리고 기타 산업보건 취약 근로자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54억 7000만 원 해서 모두 127억 10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우리 소위에 제의하고, 장관께는 우리 위원회가 이와 같은 증액을 해 드리면 집행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국회에서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어려운 때 일수록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 예산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신용보증 대위변제사업인데 보증·담보 제공이 곤란한 취약 근로 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부를 받아서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의 예산이 98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23.4%가 감소된 7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더 초과 집행해야 될 경우, 20% 이상 초과 집행할 경우에는 국회에 또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 돼서 집행하는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아주 35억 정도를 추가해서 한 110억 원 정도로 이 대위변제사업을 늘릴 것을 제안하면서 정부에 동의를 구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정진섭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실업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은 실업급여의 월수를 좀 더 늘려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수를 늘리는 것은 법정사항이므로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실업급여를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가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안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 중에서 여력도 충분한 만큼 실업급여 예산을 한 2000억 정도 더 증액 편성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장관의 견해를 구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실업급여 예산을 그렇게 충분히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도 대책을 세우는 데 굉장히 크게 힘을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연장 급여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면 또 이 테두리 안에서도 보완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원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정말 저희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채용박람회도 효과가 있느냐고 저희 위원회에서 늘 많은 지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예산을 깎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3억 6000만 원이 책정됐던 채용박람회 지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17억 5000만 원으로 줄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17억 5000만 원 정도에 오히려 곱하기 2를 해서 한 35억 정도를 책정해서 보다 채용박람회가 더 많이 열려서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증액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취업박람회의 경우에 한편으로 행사만 요란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도 비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취업박람회라는 것이 일자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기회에 더, 이런 상황에서는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소극적

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좀 증액을 해 주신다면 대단히 바람직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이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날인데 그 기념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 쪽에서는 특히 그분의 뜻을 좀 기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경기도에서 부지를 좀 마련한다고 한다면 건축비는 우리 노동부에서 제공하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동안 저희들도 이런 기념관을 세울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서울시하고도 다소 좀 알고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더 진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부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태일 열사의 여러 가지 희생은 우리나라 근로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사건이고, 또 높이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이야말로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가 자기 의지를 표현한 예산이고, 또 장관의 의지도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해 드리고 나면 정말로 꼼꼼하게 낭비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和洙 委員 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운 그러면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장관,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09년도 총 재정액이 274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원이? 거기다 10조 해 가지고 284조 원입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우리 노동부가 얼마 전에 11조

437억 원?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11조……

○**조원진 위원** 추가예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비율로 보면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 계층의 복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좀 정부 전체 예산 비율로 봐서 적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기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SOC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도 있고,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전체 10조 원 중에서 4.6조 원이 아마 SOC 투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부분이 한 1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윤 간사, 정진섭 간사와 사회교대)

○**조원진 위원** 그래서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문제의, 아까 조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비정규직 분들이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데 대한 예산 부분,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이 10만, 50만 이렇게 하면 한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점프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사업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2년 연장을 해서 빨리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기에 장관님의 어떤 능력이 발휘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비정규직 전체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분들을 위한 입장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단순히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경제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경제 현실로 볼 때 이상만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의 추진해야 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고용보험기금의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보다 직접적으로 지금 제안하신 그런 방향도 실제로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원진 위원** 17일부터 예결소위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소위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 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회에서 고언의 충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주셔야 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심사를 할 때 준비를 하고, 또 예결위 올라가서도 좀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아까 비정규직 문제는 양대 노조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 형성을 하셔야 될 것이다.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철폐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바로 시기적인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하든지, 지방경제 발전에 대한 대책을 먼저 주고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대안을 먼저 주시고 기간 연장 부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순서만 잘 조정을 하시면 어려운 경제난국에 어려운 분들이 길로 내몰리는 그런 문제는 없겠다.

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직고용직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노동자,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주장하는, 그 편에 서서 말을 해 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직고용직에 대한 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또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지

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비정규직 문제보다 더욱더…… 특수직고용직들의 말은 하납니다. 비정규직이라도 ‘노동자’라는 표현, 그래서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분들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어려운 시기니까 체크를 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다른 부분 중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예산에서 꼭 시기적인 부분, 또 한 가지는 지역의 형평성 예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지역 편중 예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형평성 문제도 좀더 재고를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나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해외 재외동포에 대한 근로자지원센터 관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다 훑어봤는데 용역비도 하나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정감사에서 그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 이분들을 어떠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데리고 올 것인가, 통계에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올리셔서 가지고 그런 데 전반적인 용역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외교통상부라든지 지경부라든지 다 통합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비로 올려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부분은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 때는 지역 편중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고, 또 2개라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올리면 좋을 것 같고 말이지요.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 또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고 있는 노동부에서 많은 지혜를 갖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조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범위 안에서 하루라도 빨리, 또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기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위원장대리 정진섭 우리 위원들은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장관께서 잘못 말씀하시면 이것이 잘못된 시그널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답변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위원장대리 정진섭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성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장관님께서 지금 답변을, 제가 사실은 다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답변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관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근로자들이 울고 웃는 그런 정도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섭 간사님께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장관님께서 전태일 열사 기념관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거기에 예산도 반영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 정말 고맙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암울했던 우리 노동시장뿐 아니고 우리 노동의 등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느 부분은 왜곡됐고, 어느 부분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아주 바닥에 깔려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노동계의 위원으로서 상당히 가슴 뿌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장관님, 2008년 7월을 기준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약 7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생활의 적응을 돕고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지금 여러 군데 선정돼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센터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의 불균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지역주민들 간에 충돌도 있는 상태거든요.

2012년까지 센터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79억, 2009년에 73억, 2010년에 59억, 2011년에 61억 등 갈수록 줄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노동부는 올해 센터 2개소, 내년에 1개소를 더 건립해서 총 6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수 증가 추세와 그에 따른 이용 수요의 증가율을 고려할 때 대구지역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특정지역을 거론하기보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보다 밀집돼 있는—많이 있는—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동시에 다 문을 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근로자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일하는 내용을 보면 외국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사업의 예산에……

○**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께서 지역의 불균형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인지역만 해도 세 군데가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만 대구 경북지역에 없다 해서 지난 번 본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한편 한국센터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2년마다 이사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또 불필요한 이전비용이 2년마다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실현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도 그 점은 동감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특히 거기서 많은 외국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다보니까 건물 사정상 비워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고 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예산상 낭비랄까 이런 측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체에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센터 1개소를 추가 신설하고 한국센터의 매입비용 및 운영비, 그리고 센터 내 종사자의 지위개선을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이 50억에서 60억 정도가 더 증액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외국인근로자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에 대한 내년 예산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증액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근로자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6500개소를 대상으로 취약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2009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10억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강성천 위원** 본 사업은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취약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지도·상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취약사업장은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없거나 근로조건 개선에 역력이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즉,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실제로 지금 저희들 근로감독 행정인원이 1600명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결원도 있어서 거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대상 사업장 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세한 취약사업장의 경우에 행정력이 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스스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서 우선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만들고, 그에 따른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해당 사업의 자율개선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근로감독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주 교육이나 점검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단순한 노무컨설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런데 실제로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개선하라고만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시정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 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흐지부지한 결과를 낳도록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성천 위원 차라리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 역량을 검증해서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도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사실 근로감독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 증원하지 못하는 애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살펴보면 2008년 현재 근로감독관 정원이 1241명입니다. 이중에 160명이 지금 노동부의 결원이지요? 예를 들어서 휴가나 뭐니 해서 실질적으로 160명이 없다고 하는 얘깁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원을 시급히 보충하고 취약사업장 전담반이라도 편성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결원된 부분은 아마 12월 초에 한 300명 가까이 신규지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저희들 업무가 좀 원활해 질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노동행정의 가장 기본은 영세

사업장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래서 장관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영세사업장일수록 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분규도 많이 나고, 분규가 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곳도 그곳이고, 또 필요 이상의 낭비가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정원이 1241명인데 지금 이 어려울 때는 상당수 증원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진섭 정리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전체적인 정원은 1600명이 고요, 거기에 산업안전감독관을 제외하면 아마 1200명 정도 될 겁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니까 감독관 애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현장에 근로감독을 많이 내보내서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면서 애로를 들어주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합니다. 그 애로를 들어서 노사가 원만하게, 그리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장관님, 폴리텍대학 시설 확충 사업비 예산이 삭감됐어요. 지금 노동부에서 노후화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증·개축 방안이 마련된 것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폴리텍대학의 시설 확충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노동부가 대학 캠퍼스에 대한 노후화 실태를 점검해서……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공 부문 인프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부득이 그 부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각 지역의 고용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증·개축이라든가 신축,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은 사실 폴리텍 시설이 보다 더 개선되어 가지고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김재윤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격검정사업 예산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가지고 앞으로 자격 취득자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국감에서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를 저희가 지적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구체적인 답변을 담당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청소년,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대로 근로조건을 알리도록 하는 홍보회 사업은 일부 편성되었는데 오전에 장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단체들과 연계해서 상담하고 교육하는 사업은 편성이 못 돼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런 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예산을 죽 보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나는 50억 원을 전부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에 기금을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노총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동안 한국노총에서 한 장학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비정규직 장학금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자녀를 위한 것은 결코 아

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래 목적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주노총 쪽에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절한 것은 아니고 민주노총 쪽에서는 정부에 이런 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김재윤 위원** 민주노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한국노총 장학재단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50억 이상을 편성해서 이렇게 위기상황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지금 자활훈련사업, 산업재해자 재활사업 예산이 삭감됐어요. 자활훈련사업이나 산업재해자 재활사업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데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 실무자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입니까, 아니면 재활입니까?

○**김재윤 위원** 재활, 자활훈련사업도 있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자활훈련사업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의뢰받은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산업재해자 재활사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입니다.

그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예산으로 안 하고 급여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에서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급여에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김재윤 위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

산업재해자들에 대한 재활사업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김재윤 위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챙기셔 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차질 없이 집행이 됩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글로벌 청년 리더 사업은 지금 10만 명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명 중에서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해외취업 5만 명, 자원봉사 2만 명, 해외 인턴 3만 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턴 부문하고 자원봉사 부문은 외통부 지경부 그런 데하고 같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부분은 해외취업 부문만 맡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자칫하면 해외취업 부문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이 IMF 이후에 죽 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취업률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취업률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외공관에 취업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상이랄지 KOTRA 그런 데하고 해서 취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가능하다면 취업률을 높이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청년인턴제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지금 그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인턴 6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돼서 6개월 지원하는 부분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단 채용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산업재해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정책, 또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편성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고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취약지대의 한 부분인 특수고용종사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영역의 근로자들 아니면 사실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떤 방책이 구체화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윤 위원**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김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된 예산이 올해 3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노사관계 선진화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또 그중 핵심이 노사가 상생하는 기업문화 노동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태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서로 다 여유가 없고, 더 긴장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당장 구조조정이거나 이런 게 현실화되면 노조도 굉장히 긴장하고, 또 사용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여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 갈등이나 분규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 내년 후년에는 사업장별로 복수노조 문제, 또 노조전임 임금지급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갈등요인으로—긴장요인으로—있는데 노사관계 선진화 부분에서 이런 상생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 잡아놓고 예산도 편성해 왔는데 제일 예산이 많은 게 선진화 홍보 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6억가량 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해진 위원**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는 생각

이 드는데 첫째는 노동부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산이 내년도에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사용자들의 새로운 노사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여유가 있는 예산인지, 좀 딱딱하게 잡아놓으신 것인지?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실 여유 있는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긴축기조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감한 증액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노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또 그런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와 또 계몽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낍니다.

○**조해진 위원** 공중과같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데는 사실 홍보비가, 광고비가 엄청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해진 위원** 몇 번 하고 나면 사실 별로 기회가 없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여유있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정부부처들이 하는 각종 홍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고민이나 문제의식,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적·홍보적 감성 이 부분에 대한 천착이 좀 부족하다,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도 있고 관성도 있고 약간 타성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와 그 감성에 접근하기보다는 제도적·계몽적인 홍보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효과가 적다고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왕 예산도 좀 충분히 뒀으면 좋겠지만 그걸 집행하실 때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만 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 오던 걸 조금 더 체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홍보방법을, 홍보물 제작에서부터 해 가지고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주도 주고 그러실 텐데 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의 피부에 딱 다가오게, 공감이 되게 이걸 만드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해 오던 관성대로 그냥 해서 납품하고 이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예산도 중요하니까 면밀히 살펴

보셔 가지고 국민감성에 터치가 되고 공감이 되고 눈높이가 맞는 그런 제대로 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그런 하나하나 홍보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진섭**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동부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노동부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시간 안에 예산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체토론 중에는 김상희 위원님, 박대해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이운성 위원님, 권선택 위원님, 이화수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홍희덕 위원님, 강성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위원님들의 질의취지에 맞게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중에 박대해 위원님으로부터 우리나라 산업인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인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률안 및 정책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특별소위원회를 두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사항은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간사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해당 법안 상정 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재윤 위원님, 홍희덕 위원님, 강성천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부, 노동부 및 기상청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사 장
한국노동교육원장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산재의료원이사장

허 병 기
남 석 현
정 인 효
정 수 성

○출석 위원(14인)

강 성 천	권 선 택	김 상 희	김 재 윤
박 대 해	박 준 선	원 혜 영	이 윤 성
이 화 수	정 진 섭	조 원 진	조 해 진
추 미 애	홍 희 덕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병 길
전 문 위 원	윤 진 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노동부			
장 관	이 영 희		
차 관	정 중 수		
기 획 조 정 실 장	송 영 중		
고 용 정 책 실 장	신 영 철		
노사협력정책국장	이 채 필		
근로기준국장	이 기 권		
산업안전보건국장	정 현 옥		
고 용 정 책 관	이 재 갑		
직업능력정책관	조 정 호		
고용평등정책관	김 태 흥		
고용서비스기획관	이 우 룡		
국제협력관직무대리	이 재 흥		
정 책 기 획 관	박 찬 형		
감사관직무대리	김 성 구		
대 변 인	송 봉 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 원 배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노 민 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 재 섭		
중앙노동위원장	이 원 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원 장	김 대 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단 이 사 장	김 선 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장	전 운 기		